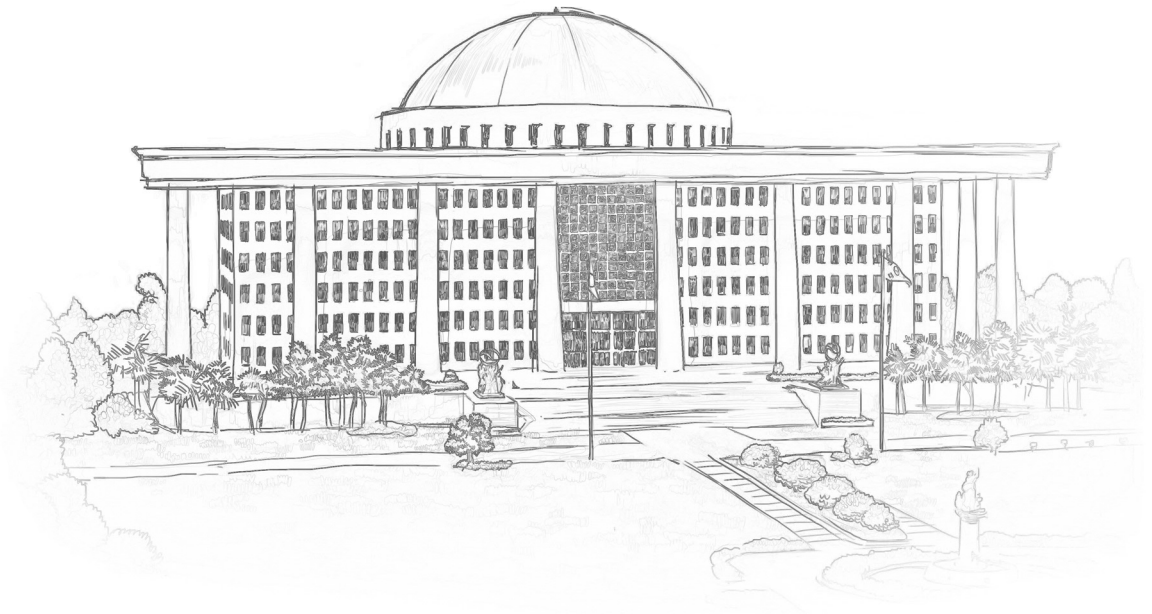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제3회 나라살림 대토론회

일시: 2011. 10. 31(월) 10:00~12:00

장소: 의원회관 대회의실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1. 10. 31 (월) 10:00~12:00

대 토 론 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진행순서

개회 (10:00~10:20)	[동영상]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주제 VCR		
	개회사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
	격려사	박희태	국회의장
	축사	정갑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토론회 (10:20~12:00)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사회	곽태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주제발표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심사방향	장윤석	한나라당 국회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기정	민주당 국회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토론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
		김유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주영진입니다.

먼저 정기국회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과 정갑윤 예결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데도 기꺼이 토론회에 응해 주신 장운석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님, 민주당 강기정 예결위 간사님과,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사회를 맡아주신 서강대 곽태원 교수님, 토론에 참여해주신 고려대 이만우 교수님,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연구본부장님, 경실련 김유찬 재정세제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발표를 해주실 기획재정부의 김동연 예산실장과 백운찬 세제실장, 국회예산정책처의 김준순 예산분석실장과 박종규 경제분석실장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보좌진, 학계, 국회와 행정부 관계 공무원 및 국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는 세계 경제의 침체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체감경기 악화, 청년실업 문제, 복지수준의 확대 요구와 같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자리 확충 및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지난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2011년 대비 5.5%가 증가한 326조 1천억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은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비교적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 증진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그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원 배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 심사를 충실하게 지원하기 위해, 적정 재정규모와 세출 조정 의견을 담은 「2012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의원님들과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여러분의 폭넓은 의견을 결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이루어질 예산안 심사의 방향과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토론회를 빛내주신 박희태 국회의장님과 정갑윤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님,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10. 31

국회예산정책처장 주 영 진

격 려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박희태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우리나라 최고의 재정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예산안 대토론회를 열게 되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영진 예산정책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로,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5.5%가 증가한 326조원 규모입니다. 그 동안 국회에서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종종 보이곤 했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법대로 국회’가 되어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조기결산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결산심사를 정기국회 전에 완료하여 국회법을 준수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일정도 예년에 비해 보름 정도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여야 정당들도 헌법에 정한 시한내 예산안 처리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예산안을 순조롭고 원만하게 심의하고 처리하여 18대 국회의 화룡점정(畫龍點睛)을 장식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산은 국가의 진로를 제시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살림입니다. 무엇보다 국가 예산은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 핵심 수단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집단의 의견과 이해를 예산안에 수렴하는 통합의 모를 발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뜻을 예산안에 조화롭게 반영하고 철저히 심사하는 것은,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심의, 의결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권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예산편성 과정을 연초부터 국회에 보고하고 예산안 제출시기도 더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선과 개혁 작업이 운용되고 정착될 때, 국민을 위한 예산 심사가 그 틀을 잡아 가고, 국회도 국민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더 잘 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층의 의견이 수렴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큰 도움을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사회를 맡으신 곽태원 교수님, 주제발표에 참여해주신 장윤석 의원님, 강기정 의원님을 비롯한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0. 31
국회의장 박희태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갑윤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하는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에 참석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5%가 증가한 326조 1천억 원입니다.

정부에서는 2013년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도의 총수입 증가율보다 4.0%p 낮게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재정위기와 그로 인한 사회 갈등의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개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재정지출 규모가 미래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국가재원이 분야별로 적절히 배분되어 있는지, 개별 사업들은 우선 순위와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는지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미래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장윤석 예결위 간사님과 강기정 예결위 간사님을 비롯한 각계의 재정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내년도 예산안과 효율적 재정부운 방향에 관한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2012년도 예산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예산 삭감이 필요한 구체적 사업과 예산낭비 방지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 의견 수렴 결과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대안들이 향후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10. 31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 갑 윤

I. 예산규모 및 재정건전성 강화

- '13년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최대한 낮게 설정하는 등 재정총량 관리 강화

< 균형재정 조기달성의 의미 >

- '08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복원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완결
- 재정여력을 확충하여 미래위기에 적극 대응

- '12년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보다 4.0%p 낮게 설정

- 총지출: '11년 대비 5.5%증가한 **326.1조원**
- 총수입: '11년 대비 9.5%증가한 **344.1조원**
- 재정수지: **GDP대비 $\Delta 1.0\%$** (‘11년보다 1.0%p 개선)
- 국가채무: **GDP대비 32.8%**(‘11년보다 $\Delta 2.3\%$ p감소)

(조원, %)				
	'11예산	증가율	'12예산안	증가율
◇ 총지출	309.1	5.5	326.1	5.5
◇ 총수입	314.4	8.1	344.1	9.5
◇ 재정수지 ¹⁾ (GDP대비, %)	$\Delta 25.0$ ($\Delta 2.0$)		$\Delta 14.3$ ($\Delta 1.0$)	
◇ 국가채무 (GDP대비, %)	435.5 ²⁾ (35.1)		448.2 (32.8)	

1)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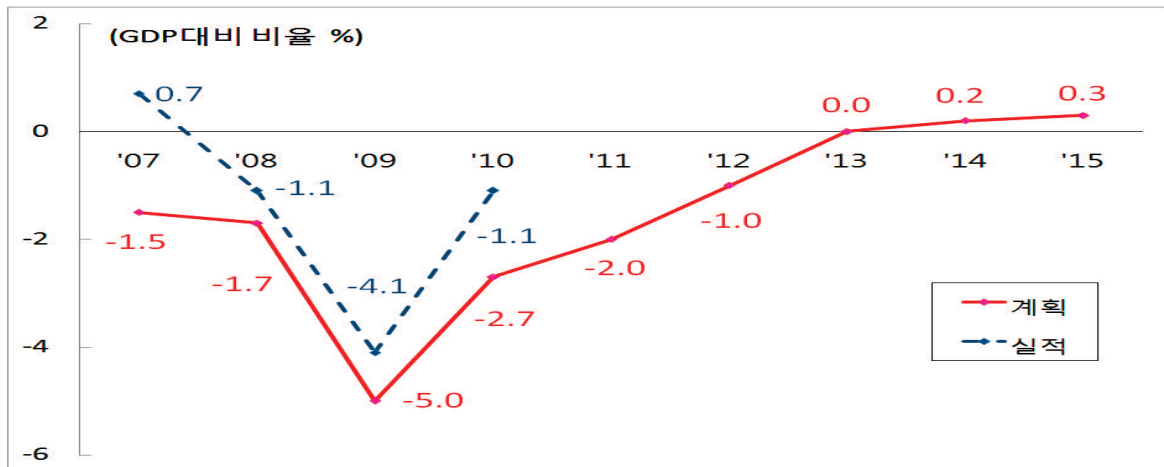
2) '11년 전망치는 422.7조원(GDP 대비 33.3%)

□ 재정수지는 점차 개선되어 '13년 균형재정 달성 전망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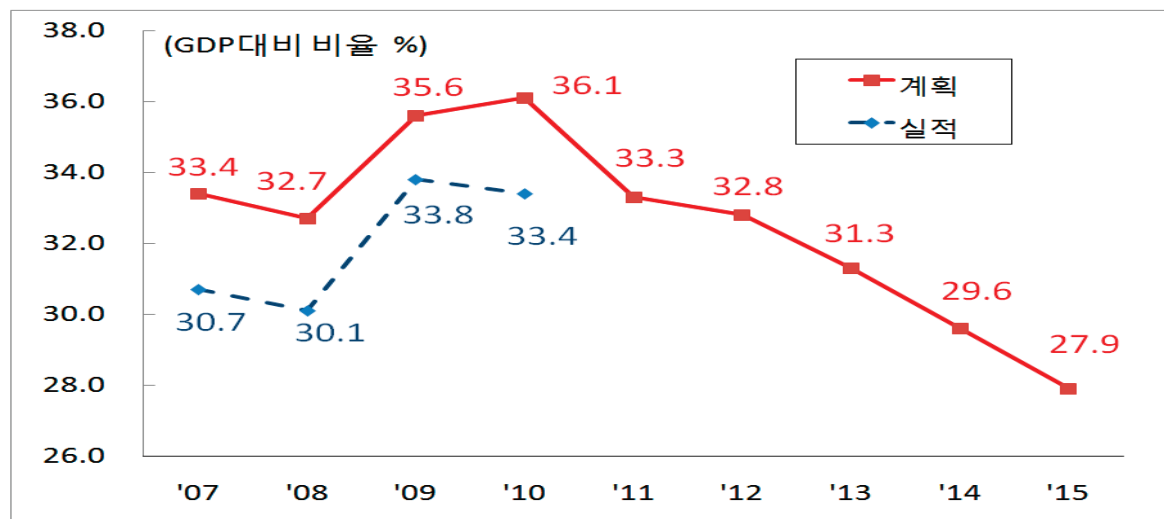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 총 수 입	314.4	344.1	375.7	395.8	415.3	7.2
◇ 총 지 출	309.1	326.1	341.9	357.5	373.1	4.8
◇ 재정수지 (GDP 대비)	△25.0 (△2.0)	△14.3 (△1.0)	0.2 (0.0)	3.1 (0.2)	5.3 (0.3)	

<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 국가채무(GDP대비)는 '13년 31%초반 수준으로 회복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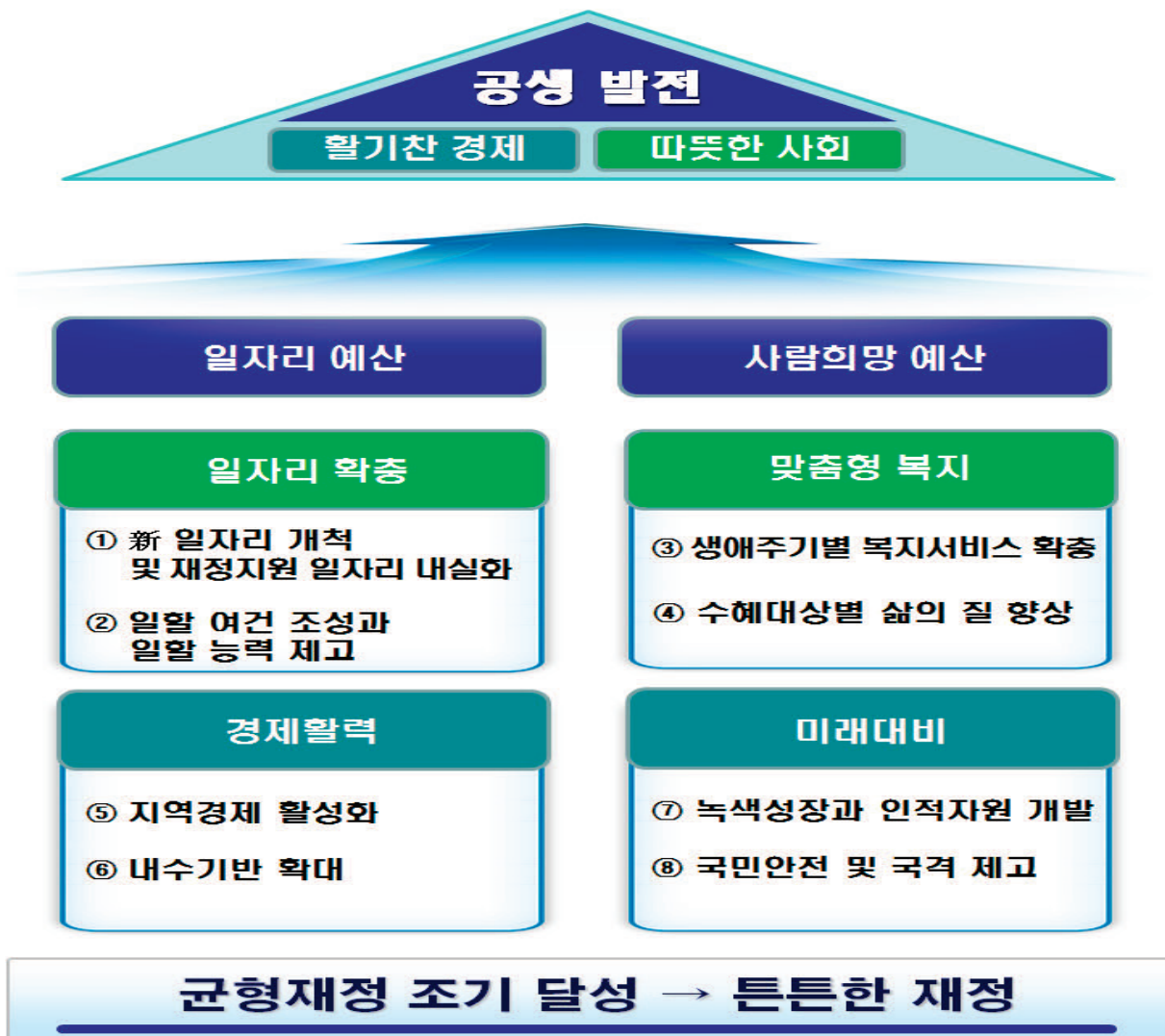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II. 2012년 예산안의 중점

◇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 단기적 경기 대응간의 균형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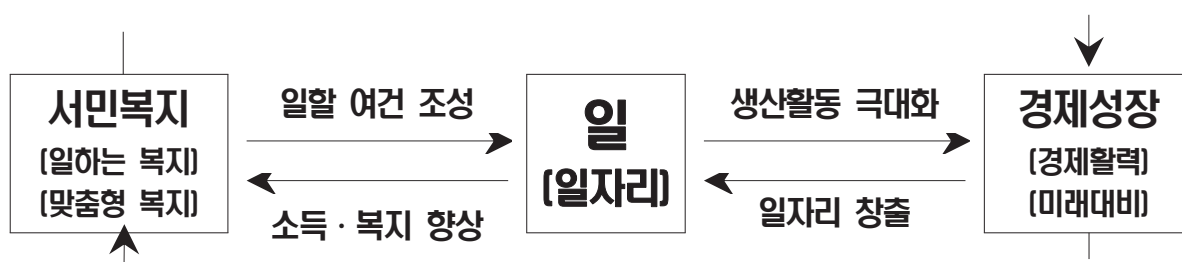
- ①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
- ②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린 예산
- ③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한 예산



1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

-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을 중심으로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

〈노동력 공급 확대 및 질 제고〉



〈복지 자원 확충〉

- 新 일자리 개척을 위한 4대 핵심 일자리를 확충하고,
일할 여건 조성 및 일할 능력 제고에 중점

(1) 4대 핵심 일자리 확충	(2) 일할 여건 조성 및 능력 제고
① 청년 창업 활성화	①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② 3단계 고졸자 취업지원	② 취업성공패키지 확대(5→7만명)
③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③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④ 사회서비스 일자리	

- SOC와 R&D투자,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
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

- 일자리 전체예산은 '11년 대비 6.8% 증가한 10.1조원

- 청년 창업 활성화 등 4대 핵심일자리는 '11년 대비 38.9% 증
가한 2.0조원을 투자하여 新 일자리 개척에 중점
-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는 2만명 확대(54→56만명)

< '12년 일자리 예산안 >

(억원)

	'11년	'12예산안	증감	%
【 합 계 】 (부문간 중복분 제외)	94,679	101,107	6,428	6.8
☐ 4대 핵심 일자리	14,397	20,003	5,606	38.9
① 청년 창업 활성화	2,350	4,953	2,603	110.8
② 고졸자 취업지원	5,629	6,429	800	14.2
③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1,305	2,170	865	66.3
④ 사회서비스 일자리	5,114	6,451	1,337	26.1
☐ 재정지원 일자리	89,574	94,530	4,956	5.5
① 직접일자리 창출	23,651 (54.1만명)	25,026 (56.2만명)	1,375 (2.1만명)	5.8
② 고용서비스 인프라	65,923	69,504	3,581	5.4
☐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670	670	순증

* SOC와 R&D투자,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은 제외

(1) 4대 핵심 일자리 중점 지원(1.4→2.0조원, +0.6조원, 38.9% 증)

청년 창업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0.2조원) 등 창업 활성화

- 수요자가 시제품 제작 등 창업 프로그램·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

고졸자 취업

3단계(재학-구직-취업) 맞춤형 취업

- (재학중)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100→150개), 심화 현장교육 실시 등 취업역량 강화 지원
- (구직중) 중소기업 청년인턴 고졸자 채용비중 확대(1.2→2만명) 등 고졸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확충
- (취업중)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확대(500→1,000명) 등 先취업 後진학 기회 확대

문화·관광 · 글로벌 일자리

블루오션 일자리 적극 발굴·지원

- 영화·음악(K-POP)·뮤지컬·만화 등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창의적 문화콘텐츠, 창조관광산업 지원 확대(0.05→0.1조원)
- ODA(공적개발원조) 인턴 및 해외봉사단을 확대하는 등 청년과 베이비 붐 세대의 글로벌 일자리 확충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一石三鳥 효과 유도

- 취약계층은 복지서비스 수혜, 돌보는 사람은 일자리 제공, 부양가족은 일할 여건 조성

(2) 일할 여건 조성 및 일할 능력 제고

□ 저임금 근로자 122만명에게 사회보험료 신규 지원(670억원)

- 일하는 빈곤층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실업·노후위험에서 보호하고 생계부담도 경감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이하
대상자에 대해 전체보험료의 1/3 지원

* 근로자 부담(월 소득 100만원 기준): 50,500 → 33,700원/월

□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2만명 확대(5→7만명) 및 참여자 탈수급
시 이행급여 신규 제공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

□ 베이비 붐 세대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기능 및 산학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3) 재정지원 일자리 내실화

□ 금년 종료예정이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고용 유지를
위해 '12년까지 연장(2만명, 53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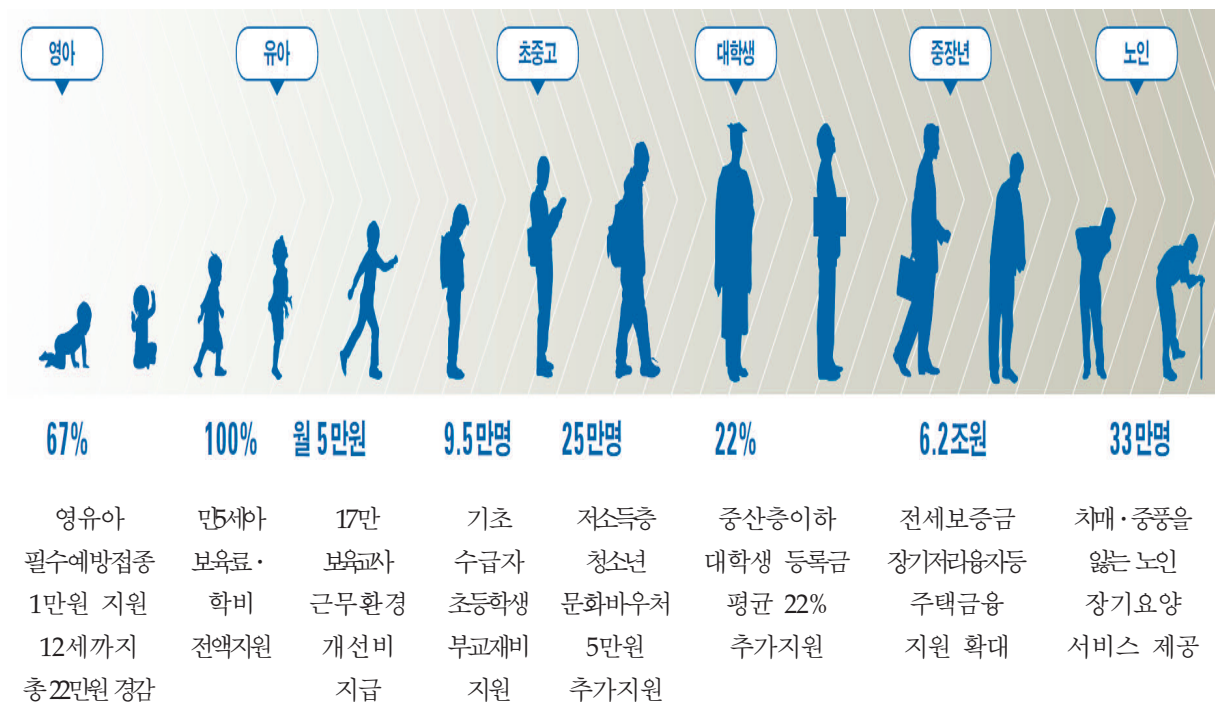
□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외한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는 금년보다 4만명 확대(50→54만명)

2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린 예산

□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 확충에 중점

○ 생애기간 중 ①보육, ②교육, ③문화, ④주거·의료를 핵심 복지서비스로 선정하여 중점 지원



○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농어업인, 장병 및 전·의경, 국가유공자 등 수혜대상별 삶의 질 향상 지원

□ '12년 맞춤형 복지예산은 '11년 대비 21.0% 증가한 25.2조원

○ 서민·중산층 위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포폴리즘과 차별화

< '12년 맞춤형 복지 예산안 >

(억원)

		'11년	'12예산안	증감	%
【합 계】		208,246	252,011	43,765	21.0
생애 주기	① 보육	4,784	13,799	9,015	188.5
	② 교육	1,349	16,578	15,229	1,128.8
	③ 문화	381	573	192	50.3
	④ 주거·의료	152,366	162,507	10,142	6.7
수혜 대상	⑤ 저소득층	296	2,700	2,404	811.5
	⑥ 장애인	1,242	3,696	2,454	197.5
	⑦ 노인	6,276	6,798	522	8.3
	⑧ 다문화가족	468	524	56	12.0
	⑨ 농어업인	3,782	4,358	575	15.2
	⑩ 장애인 및 전·의경	12,687	13,891	1,204	9.5
	⑪ 국가유공자	24,615	26,587	1,972	8.0

(1)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확충

영유아

보육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세아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 보육교사(17만명) 근무환경 개선비(월 5만원)를 신규 지원
-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시 본인부담금 인하(본인부담 15→5천원)

초중고생·대학생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2.25조원 지원(재정 1.5조원)→ 평균 22% 수준 부담 완화(7분위 이하 학생기준)
- 드림스타트 센터·지역아동 센터 등 빈곤아동 지원 강화

청장년·노인

주거안정과 필수의료 뒷받침

-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0.7→2.9만호) 및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 대출한도 인상 등 주택금융비용 부담 완화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액 인상(120→146만원) 및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약제비 지원 확대

전계층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

- 저소득층 청소년 25만명에게 문화 바우처 추가 제공
- 지역 문화시설을 활용한 토요 문화학교 100개소 신설

(2) 수혜대상별 삶의 질 향상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및 자활·자립여건 조성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6.1만명을 기초수급자로 보호
- 희망키움통장(15→18천 가구), 근로장려금(월 206→259천원)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제고

-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충(6.5→7천개)
- 장애아동은 취학전까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급

노인

사회참여 촉진 및 건강증진

- 문화해설사, 자연환경 지킴이 등 노인 일자리 22만개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 선정기준 완화로 19천명 추가 수혜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의 생활지원 서비스 전면 확대(80→200개 센터)

농·어업인

자립형 복지 증진

- 농지연금 확대(500→2,089명), 농어업 재해보험 강화(50→61개)

장병 및 전·의경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

- 장병 급식비 인상 및 전·의경 버스를 우등버스로 교체(50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 특별수당 인상, 국립묘지 추가 조성(중부권, 제주권)

참고

'12년 예산안 시민공감 12대 과제

아동·여성	①장애아동 양육수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취학전까지 지급
	②입양아동 양육수당	양육수당을 50%(월10→15만원) 인상
청년·청소년	③대통령 드림 장학금	저소득층 우수학생(매년 신규 5명)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
	④문화바우처 확대	저소득층 가구에 청소년 1인당 5만원 바우처를 지급
노인	⑤생활체육활동 지원	생활운동용품 지원 경로당 수를 10배(1천→10천개소)로 확대
	⑥문화프로그램 운영	지방문화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혜택자가 2배(3.5→7천명)로 확대
장애인	⑦장애인 복지 일자리	장애인 복지 일자리(월44→56시간)가 늘어나고 단가가 30% 인상(월20→26만원)
	⑧발달장애인 부모교육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교육을 신규로 실시('12년 약 700명)
농어민·소상공인	⑨농지연금 확대	농지연금 수급인원(0.5→2천명)이 크게 확대
	⑩온누리상품권 발행	상품권 발행액(1,300→2,000억원) 및 사용가능 점포대상이 확대
저소득층	⑪기초수급자 건강검진	기초수급권자에 대해 2년마다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12년 34만명 혜택)
	⑫저소득층 난방 지원	기초수급자에게 동절기 난방유(200L)를 제공('12년 3만 가구 추가 혜택)

3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한 예산

□ 경제활력·미래대비 예산은 '11년 대비 8.1%증가한 61.0조원

○ 지방이전 재원은 '11년 대비 7.1% 증가한 102.7조원

< '12년 경제활력·미래대비 예산안 >

(억원)

		'11년	'12예산안	증감	%
【 합 계 】 (부문간 중복분 제외)		564,339	609,770	45,431	8.1
지역 경제 활성화	4대강·엑스포 외 SOC	209,501	222,349	12,848	6.1
	4대강 외 환경투자	13,138	14,916	1,778	13.5
내수 기반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42,466	45,617	3,151	7.4
	서비스산업 육성	14,769	15,897	1,128	7.6
	돈버는 농어업 육성	24,835	29,406	4,571	18.4
녹색성장 및 인적자원 개발	저탄소 녹색사회	37,848	40,360	2,512	6.6
	신성장동력분야 연구개발 투자	72,025	77,427	5,402	7.5
	고등교육 투자	3,390	7,492	4,102	121.0
국민안전 및 국격 제고	재해예방 및 생활안전	44,003	52,088	8,085	18.4
	국방투자 및 통일대비	111,023	116,164	5,141	4.6
	ODA 확대	16,473	18,704	2,231	13.5
※ 지방이전재원		959,051	1,027,088	68,037	7.1

(1) 지역경제 활성화

□ SOC투자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환경투자 확대

- 4대강 사업 완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투자는 유지(4대강, 여수엑스포 지원 제외시: 21.0→22.2조원)

(조원)

	'09	'10	'11	'12안
▪ SOC 예산	25.5	25.1	24.4	22.6
- 4대강 살리기	0.8	3.2	3.1	0.3
- 여수엑스포 지원	0.2	0.3	0.4	0.1
- 도로·철도 등	24.5	21.6	21.0	22.2

- 一石三鳥(지역경제 활성화 + 수질개선 + 수해예방) 효과가 있는 공단 폐수시설, 하수관거 및 생태하천 등 환경투자 확대

□ 지방재정 지원 확대로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

* 지방이전재원(교부세+교육교부금+보조금): 95.9→102.7조원(7.1% 증)

(2) 내수기반 확대

□ 중소기업 정책자금(3.2→3.4조원)과 R&D투자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판매전 확대(25→40회) 등 판로개척 지원

- 골목수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2년까지 나들가게 1만개 확충

□ 영화·만화 등 문화콘텐츠 지원을 확대(449→887억원)하고 3D·스마트 등 첨단 문화산업 적극 지원

-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권역별로 특화전문센터 건립을 확대하는 등 의료산업 글로벌화 지원

(3) 녹색성장과 인적자원 개발

- ☐ 저탄소 녹색사회·녹색산업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에 전기차 2,500대 보급
- ☐ 기초·원천투자 비중 50%이상 확대 등 R&D투자 확대
 - 줄기세포 은행 설립 등 줄기세포 분야에 1천억원 투자
- ☐ 국립대학 법인화 등 대학자율성에 기초한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 인문학 진흥, 사회과학 연구 등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시간강사 처우개선(6→7만원) 등 사각지대 완화

(4) 국민안전 및 국격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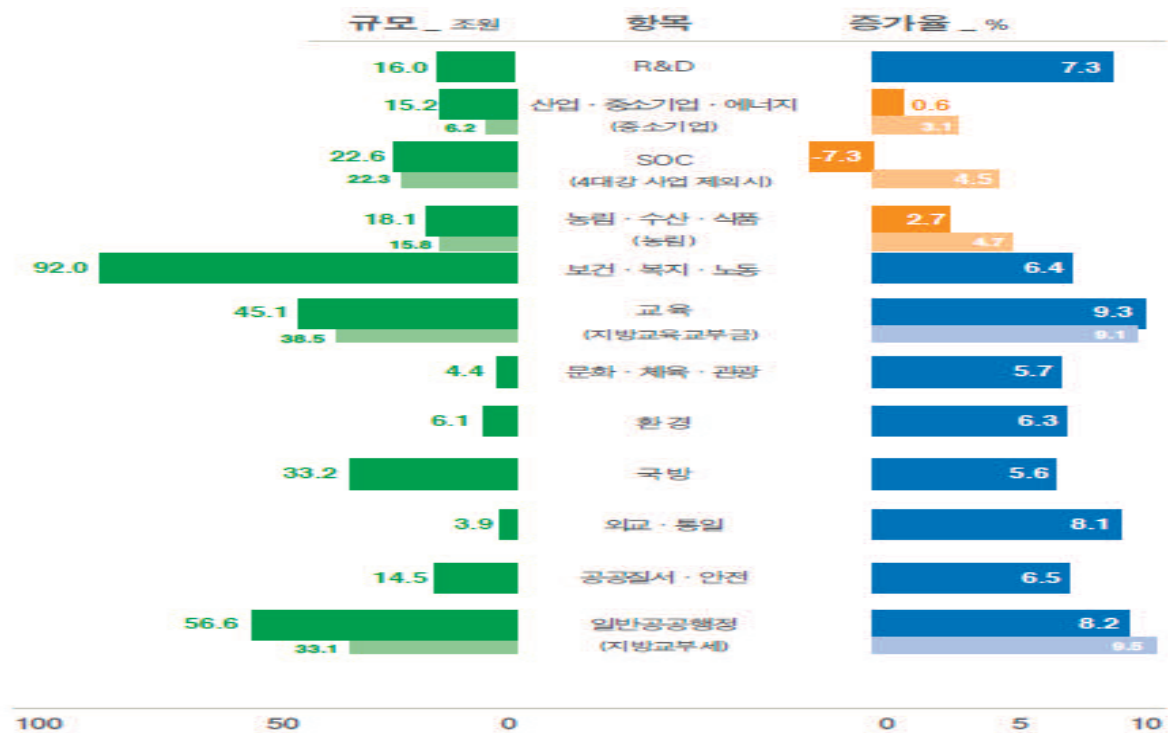
- ☐ 기상이변에 대응한 방재시스템 구축(4.3→5.1조원) 등 재해예방 투자 확대
 - 성범죄 예방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 생활안전 투자 확대
- ☐ 과학화 훈련장비 등 군 교육훈련을 확충하고 전시작전권 전환('15.12)에 대비한 핵심전력 보강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규모 확대(600→750억원) 등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 지원
- ☐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소득(GNI) 대비 0.15%로 확대

* ODA 규모(ODA/GNI 비율): ('11)1.65조원(0.13%)→('12안)1.87조원(0.15%)

Ⅲ.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

1 분야별 규모 및 증가율

- ◇ 12대 분야 중 가장 큰 복지분야는 92.0조원(총지출 대비 28.2%)으로 '11년 대비 6.4% 증가
- SOC, 산업·중소기업, 농림분야는 총지출 증가율(5.5%)보다 낮은 증가율 수준



2

분야별 자원배분 내용

R&D

투자는 지속 확대하되 효율화 제고노력 병행

-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 ('11)47.4 → ('12)50% 이상
- 국과위를 중심으로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R&D투자의 효율성 제고

산업·중소기업

경제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중소기업 정책자금(3.2→3.4조원), 기술개발 확대(0.6→0.7조원)
- 바이오, 첨단 융·복합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 투자 확대

SOC

적정 투자수준 유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 4대강 살리기(△2.8조원), 여수엑스포 지원(△0.3조원) 등 완료사업을 제외한 SOC투자는 적정수준 유지(21.0→22.2조원)
- 고속철도 등 철도투자 비중을 제고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등 시급하고 우선순위 높은 분야 중점 투자

* 도로:철도 투자: ('11) 1.4 : 1 → ('12안) 1.2 : 1

농림·수산·식품

농식품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 한·미 FTA 보강투자 확대: ('11)1.6 → ('12)1.9조원
- 농식품 R&D투자 확대(8,625→9,086억원), 종자산업 육성, 친환경 양식 등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

보건 · 복지 · 노동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중심 지원

-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과 근로의욕 제고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수: 54→56만명

- 생애주기별 · 수혜대상별로 가장 필요한 맞춤형 복지 지원

교육

대학생 학비부담을 경감하고 평생 · 직업훈련 강화

- 대학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소득수준 등에 따른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도입하여 대학생 학비부담을 경감
- 대학 · 지자체의 평생교육 확대(54→133억원) 및 특성화고를 취업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환경

환경개선 인프라 확충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오염이 심한 하천을 중심으로 수질개선 투자 확대(1.2→1.4조원)
- 전기차 보급(800→2500대), 온실가스 감축기반 마련 등 환경위기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투자 강화

국방

현존전력 극대화를 위한 장병 사기진작에 중점

- 전투부대 부사관 장려수당(월5~7만원) 신설, 신병훈련소 위생 개선(188→476억원) 등 장병복지 향상
- 방위력개선비는 국지도발과 전시작전권 전환('15.12) 대비를 위해 한국형 기동헬기 등 필수 핵심전력 위주로 투자

1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

(1) 2011년 국세수입 전망 및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

(단위: 조원, 괄호안은 증감율, %)

	'11 예산	'11 전망	'11 예산대비	'12 예산	'11 예산대비	'11 전망대비
■ 총 국 세	187.6	192.8	5.2 (2.8)	205.9	18.3 (9.7)	13.1 (6.8)
○ 소 득 세	40.0	42.3	2.3 (5.8)	46.0	6.0 (15.0)	3.7 (8.7)
- 근로소득세	16.5	18.9	2.4 (14.7)	20.6	4.1 (24.7)	1.6 (8.7)
- 종합소득세	6.4	7.9	1.5 (22.6)	8.7	2.2 (34.7)	0.8 (9.9)
- 양도소득세	8.7	7.0	△1.7 (△19.3)	7.5	△1.2 (△13.8)	0.5 (6.7)
○ 법 인 세	41.3	44.2	2.9 (7.0)	44.5	3.2 (7.6)	0.3 (0.6)
○ 부가가치세	52.9	52.1	△0.8 (△1.6)	56.8	3.9 (7.3)	4.7 (9.0)
○ 기 타	53.4	54.2	0.8 (15.0)	58.6	5.2 (9.9)	4.4 (8.1)

① '11년 전망: '11년 예산(187.6조원) 대비 5.2조원 증가한 192.8조원

- 근로소득세는 고용확대 등 근로소득 상승으로 증가(+2.4조원)
종합소득세는 '10년 경기회복으로 증가(+1.5조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감소(△1.7조원)
- 법인세는 기업실적 호조로 증가(+2.9조원)
- 부가가치세는 소비둔화 및 수출증가로 감소(△0.8조원)

② '12년 예산: '11년 전망(192.8조원) 대비 13.1조원 증가한 205.9조원

- 경상성장을 둔화에 따른 세수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 증가, 민간소비 증가 및 임투공제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등 세법개정 효과로 6.8%(13.1조원) 증가
 - 근로소득세는 고용증가 및 임금상승에 따라 증가(+1.6조원)
 - 법인세는 기업실적 둔화로 소폭 증가(+0.3조원)
 - 부가가치세는 소비 및 수입 증가로 증가(+4.7조원)

[2] 주요 세목 관련 2011년 세수 분석

① 소득세: 42.3조원 (11년 예산 40.0조원 대비 2.3조원 증가)

① (근로소득세) 18.9조원('11년 예산대비 +2.4조원, 14.7% ↑)

- 고용확대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승에 따라 증가

* 취업자수(천명): ('10.9월) 24,054 → ('11.9월) 24,318 (+264)

** 근로소득(가계동향조사(3~5분위), 천원): ('10.2/4) 3,159 → ('11.2/4) 3,329 (5.4%↑)

② (종합소득세) 7.9조원('11년 예산대비 +1.5조원, 22.6% ↑)

- '10년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경상성장률 10.1%)으로 세수 증가

* '11년 종합소득세는 '10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

③ (양도소득세) 7.0조원('11년 예산대비 △1.7조원, △19.3% ↓)

-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세수 감소

② 법인세: 44.2조원 (11년 예산 41.3조원 대비 2.9조원 증가)

○ '10년 기업실적의 호조로 세수 증가

* '10년 상장법인 영업이익의 증가율: 45.9%

③ 부가가치세: 52.1조원 (11년 예산 52.9조원 대비 △0.8조원 감소)

○ '11년 민간소비 둔화와 수출증가에 따른 환급세액 증가 등으로 인해 세수 감소

*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10) 4.1 → ('11.1/4) 28 → ('11.2/4) 3.0

** 수출액(억불): ('10.9월 누계) 3,376 → ('11.9월 누계) 4,160(23.2% ↑)

(3) 주요 세목 관련 2012년 세수 분석

① 소득세: 46.0조원 (11년 전망 42.3조원 대비 3.7조원 증가)

① (근로소득세) 20.6조원('11년 전망대비 +1.6조원, 8.7% ↑)

- 명목임금 상승(5.5%)과 고용확대(28만명)에 따라 증가

② (종합소득세) 8.7조원('11년 전망대비 +0.8조원, 9.9% ↑)

- '11년 소득 증가로 인해 세수 증가

* '12년 종합소득세는 '11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

③ (양도소득세) 7.5조원('11년 전망대비 +0.5조원, 6.7% ↑)

- 부동산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세수 증가

② 법인세: 44.5조원 (11년 전망 44.2조원 대비 0.3조원 증가)

○ '11년 기업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금리상승 등으로 세수 소폭 증가

* 상장법인 영업이익 증가율(%): ('10년 상반기) 79.7 → ('11년 상반기) △6.1

- 삼성전자 △28.9%, LG 디스플레이 △119.0%, 포스코 △12.0% 등

** 회사채금리 전망(3년 만기 AA- 기준, %): ('11) 4.5 → ('12) 5.0

③ 부가가치세: 56.8조원 (11년 전망 52.1조원 대비 4.7조원 증가)

○ '12년 민간소비 증가(3.9%)와 수입액 증가(10.5%) 등으로 인해 세수 증가

2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 등

1 조세부담률: 19.3%('10년) → 19.3%('11년^예) → 19.2%('12년^예)

- '12년 조세부담률은 기업실적 둔화 등으로 '11년보다 다소 하락($\Delta 0.1\text{p}$)할 것으로 예상

* 조세부담률 추이(%): ('95) 17.6 → ('00) 18.8 → ('05) 18.9 → ('10) 19.3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주요국들보다는 높지 않으나 주변경쟁국들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

< OECD 주요국의 조세·국민부담률('08년 기준, %) >

	OECD 평균	미 국	독 일	프랑스	캐나다	영 국
조세부담률	25.8	19.5	23.1	27.1	27.6	28.9
국민부담률	34.8	26.1	37.0	43.2	32.3	35.7

< 주변 경쟁국의 조세부담률('08년 기준, %) >

일본	중국	인도	싱가포르	홍콩	대만
17.3	18.0	17.0	13.7	13.0	13.9

2 국민부담률: 25.1%('10년) → 25.1%('11년^예) → 25.1%('12년^예)

- '12년 조세부담률이 다소 하락함에도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부담률의 상승으로 '11년과 유사한 수준

3 국세·지방세 구조

- '12년 국세 증가율(6.8%)에 비해 지방세 증가율(7.6%)이 크므로 지방세 비중은 소폭 증가

* 전체 조세 중 지방세 세수 비중(%) : (10) 21.7 → (11) 21.4 → (12) 21.5

3 중기 국세수입 전망('11~'15년)

(단위: 조원, %)

	'10	'11 ^e	'12 ^e	'13 ^e	'14 ^e	'15 ^e
· 국세수입 (증가율)	177.7	192.8 (8.5)	205.9 (6.8)	224.2 (8.9)	242.6 (8.2)	262.3 (8.1)
· 지방세수입	49.2	52.5	56.6	60.9	65.3	70.0
· 실질성장률 (경상성장률)	6.2 (10.1)	4.5 (8.2)	4.5 (7.6)	4.5 (7.6)	4.5 (7.3)	4.5 (7.1)
<조세부담률>	19.3	19.3	19.2	19.4	19.5	19.7

① 중기 국세수입

- '13년 이후 국세수입은 8%대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
 - '11~'15년 기간 중 7%대의 경상성장률이 유지되고,
 - 세입구조에서 누진적인 탄성치 효과가 발생하며,
 -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현행유지, 비과세·감면 정비, 과표양성화 등 세입확충 노력이 반영된 결과

② 조세부담률

- '15년 조세부담률은 '11년 이후 지속적인 세입확충 노력 등에 힘입어 19.7%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참고1

'12년 세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세 목	'11년		'12년 예산	'11예산 대비		'11전망 대비	
	예산	전망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1,876,361	1,928,405	2,059,250	182,889	(9.7)	130,844	(6.8)
○ 소득세	400,379	423,410	460,299	59,920	(15.0)	36,889	(8.7)
· 근로소득세	164,983	189,275	205,695	40,712	(24.7)	16,420	(8.7)
· 종합소득세	64,293	78,820	86,596	22,303	(34.7)	7,776	(9.9)
· 양도소득세	86,977	70,214	74,936	△12,041	(△13.8)	4,722	(6.7)
○ 법인세	413,001	441,825	444,578	31,577	(7.6)	2,753	(0.6)
○ 상속증여세	30,921	33,928	36,861	5,940	(19.2)	2,933	(8.6)
○ 부가가치세	529,373	521,006	568,039	38,667	(7.3)	47,033	(9.0)
○ 개별소비세	50,124	53,196	60,377	10,253	(20.5)	7,181	(13.5)
○ 증권거래세	39,207	40,771	42,480	3,273	(8.3)	1,709	(4.2)
○ 인지세	5,324	6,404	6,108	784	(14.7)	△296	(△4.6)
○ 과년도수입	45,303	42,488	44,437	△866	(△1.9)	1,949	(4.6)
◇ 교통에너지환경세	123,668	111,155	136,863	13,195	(10.7)	25,708	(23.1)
◇ 관세	113,657	121,567	116,061	2,404	(2.1)	△5,506	(△4.5)
◇ 교육세	46,018	41,698	47,696	1,678	(3.6)	5,998	(14.4)
◇ 종합부동산세	10,681	10,870	10,631	△50	(△0.5)	△239	(△2.2)
◇ 주세	26,465	26,476	29,481	3,016	(11.4)	3,005	(11.3)
◇ 농어촌특별세	42,240	53,611	55,339	13,099	(31.0)	1,728	(3.2)

참고2

'12년 국세 세입예산안 편성의 전제

구 분	'10년 실적	'11년		'12년 예산
		예산	전망	
경상성장률(%)	10.1	7.6	8.2	7.6
(실질성장률)	(6.2)	(5.0)	(4.5)	(4.5)
(GDP. def)	(3.7)	(2.5)	(3.5)	(3.0)
수출(억불)	4,664	5,000	5,625	6,115
(증가율)	(28.3)	(10.0)	(20.6)	(8.7)
수입(억불)	4,252	4,893	5,332	5,895
(증가율)	(31.6)	(13.0)	(25.4)	(10.5)
민간소비증가율(%)	4.1	4.3	3.4	3.9
명목임금상승률(%)	6.8	6.0	3.6	5.5
환율(원/\$)	1,156	1,150	-	1,070
회사채 이자율 (3년 만기 AA-기준, %)	4.66	5.5	4.5	5.0
국고채 이자율 (3년 만기, %)	3.72	-	3.7	4.3

I 2012년도 예산안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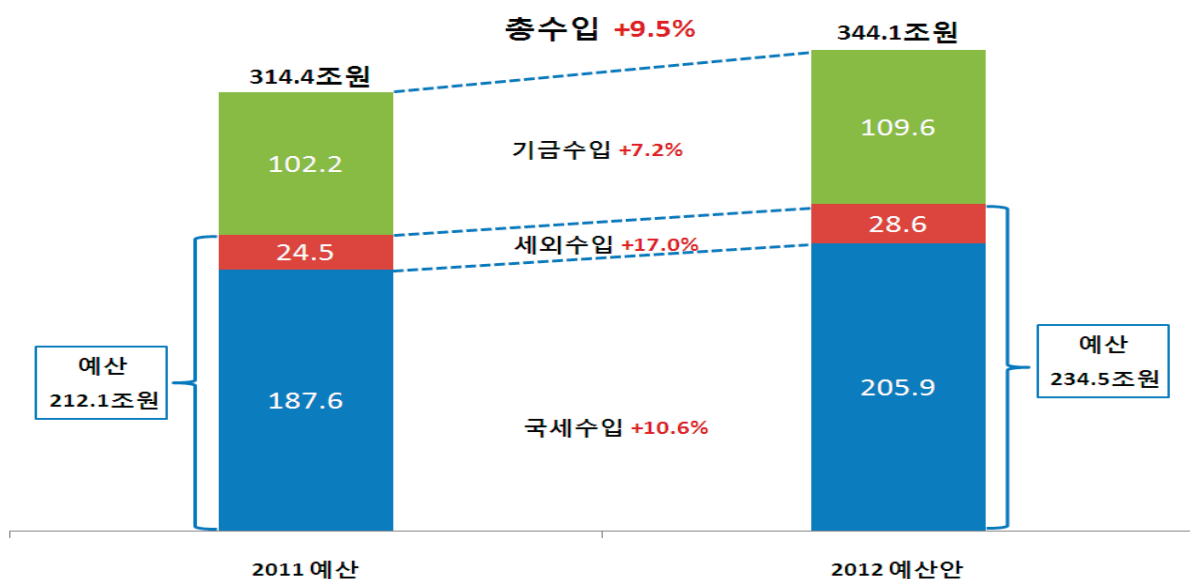
1. 수입구조 분석

가. 수입 전망 및 구조

- 2012년 총수입은 344.1조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
 - 국세수입은 205.9조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
 - 세외수입은 28.6조원으로 전년 대비 17.0% 증가
 - 기금수입은 109.6조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

〈2012년 회계별 총수입 구조〉

(단위: 조원, %)



□ 회계별 · 성질별 총수입 구조

- 국세수입은 2012년 경상성장률 7.6%, 실질성장률 4.5%를 전제로 205.9조원 편성
 - － 3대 세목의 세입예산(147조원) 총 국세수입 예산의 71.5% 점유

〈국세수입 주요 세목별 증감〉

(단위: 억원, %)

	2011 예산	2012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소득세	400,379	460,299	59,920	15.0
법인세	413,001	444,578	31,577	7.6
부가가치세	529,373	568,039	38,667	7.3
관세	113,657	116,061	2,404	2.1

-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7.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1.4조원, 신·기보 출연금 회수 0.5조원 등의 신규 반영과 정부보유주식 매각대(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공항)의 0.9조원 증가 등에 기인

〈세외수입 주요항목별 증감〉

(단위: 억원, %)

	2011 예산	2012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재산수입(정부출자수입, 이자수입 등)	1.0	2.9	1.8	177.0
경상이전수입(벌금 등)	8.4	9.6	1.1	13.5
기타유가증권매각대	1.5	2.4	0.9	58.1

- 기금수입은 전년 대비 7.2%(7.3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회보장기여금과 융자원금 회수가 각각 2.9조원, 융자원금 회수 1.2조원 증가한 것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신설(9,686억원) 등에 기인함

〈기금수입 주요항목별 증감〉

(단위: 억원, %)

	2011 예산	2012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사회보장기여금	37.6	40.5	2.9	7.8
융자원금 회수	21.2	22.5	1.3	5.9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 (토지매각대 등)	—	1.0	1.0	순증

나. 특징 및 평가

□ NABO 국세수입 전망과 4,700억원 차이

-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의 차이는 4,700억원 (0.2%)로 크지 않으나, 개별 세목 전망 차이는 다소 큰 차이를 보임
 - － 정부 전망치보다 NABO의 전망은 근로소득세는 7,000억원 낮고, 법인세는 0.6조원 높으며, 부가가치세는 0.2조원 낮고, 관세는 0.8조원 높음

□ 세외수입의 높은 증가율

- 세외수입 예산이 전년 대비 17.0%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정부보유주식 매각여부의 불투명,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수익(‘11년 0.4조원→’12년 0.8조원) 저조 우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토지매각대 실적 저조 우려 등에 따라 세외수입이 예산안과 같이 수납될지 의문

□ 정부보유주식 매각여부의 불투명

- 정부보유주식 매각대는 2조 3,352억원으로 전년(1조 4,591억원) 대비 60.1%(8,761억원) 증액 편성
 - － 세부내역별로 보면, 기업은행 매각대 1조 230억원, 산은금융지주 매각대 8,808억원, 인천국제 공항공사 매각대 4,314억원으로 구성
- 산은금융지주 및 기업은행의 경우 시장여건 악화, 헐값매각 논란, 매각계획 미비에 따라 매각대가 연내에 국고에 귀속될지 여부가 불투명
 - － 기업은행의 경우 2006년부터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나, 매각실적 전무
-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바, 동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매각이 지연
 - － 특히, 법 개정 지연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교통시설 특별회계 도로계정 및 철도계정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차질 발생¹⁾

1) 2010년의 경우 매각대금 5,909억원 전액이 도로계정에 전출되지 못함에 따라 13개 사업 2,174억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7,393억원 계상)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

〈정부 보유지분 매각대 예·결산 현황 : 2008~2012년〉

(단위: 억원)

	부 처	회 계	2008		2009		2010		2011 예산	2012 예산안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산은금융 지주	기획 재정부	일반회계	-	-	-	-	-	-	-	8,808
기업은행	기획 재정부	일반회계	9,639	-	12,190	-	12,690	-	7,198	10,230
인천국제 공항공사	국토 해양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	-	-	-	5,909	-	7,393	4,314
합 계			9,639	-	12,190	-	18,599	-	14,591	23,352

주: 다른 항목(기타유가증권매각대)과 달리 88골프장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기타재산수입 항목에 계상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 국방부 주한미국기지이전특별회계 토지매각대의 과다 계상

- 2012년 동 토지매각대는 전년 대비 274억원(12.4%) 증액된 2,487억원이 편성되었는바, 매각가능성이 낮은 토지에 대한 매각수입을 편성하는 등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임

□ 정부출자수입의 과다 계상

- 2012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22억원 증액된 8,528억원으로,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의 출자수입 예산인 3,737억원 증액되어 예산액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산출방식이 부적정하거나 부처간 동일 기관에 대한 당기순이익 전망 및 배당성향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 토지매각대 수입예산안 과다계상

- 2012년 토지매각대 예산안은 3조 907억원으로 전년 대비 3.3%(992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
 - － 혁특회계 토지매각대가 전년 대비 37.9%(4,102억원) 증가한 반면, 이를 제외한 토지매각대는 16.3% 감소한 1조 5,975억원
- 2012년도 혁특회계 토지매각대 수입은 2011년 27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 이

매각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9월말 현재 국립식량과학원 부지 1개만이 매각되어 2012년 토지매각대 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에 따른 총수입 자연증가(0.6조원)

-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1년도에 매각한 국유일반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대금은 현행 규정에 따라 2012년 일반회계로 수납되며, 2012년도에 매각한 대금은 2012년 기금 수입으로 계상
- －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신설되지 않은 경우 2012년도 매각대금은 2013년 일반회계 수입으로 계상되었을 것임

2. 지출구조 분석

가. 예산총칙안 분석

- 예산총칙은 회계별 예산총액, 국고채무부담행위, 자체 이용의 허용 범위 등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채·차입금 한도액 등을 규정하는 총괄 규정으로서, 예산의 총량 및 집행 규율에 관한 국회 심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음
- 목적예비비 증액 규모 과다
 - 2012년도 목적예비비는 1조 4,000억원,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은 1조 3,000억원으로 각각 2011년 대비 2,000억원, 3,000억원 증액됨
 - － 이는 최근의 구제역 파동 등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재정적 대응능력 확충을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목적예비비 및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변화 추이〉

(단위: 조원, 억달러, %)

	2010	2011 (A)	2012(안)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목적예비비	1.0	1.2	1.4	0.2	16.7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1.0	1.0	1.3	0.3	30.0

- 목적예비비의 경우 재해 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이 3,000억원 증액되고 일반예비비도 별도로 1조 4,000억원 편성(2011년 대비 2,000억원 증액)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액 규모가 과도함
 - － 전체 예비비 및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규모가 2011년 대비 7,000억원 증액된 4조 1,000억원에 이르고 있는바, 예비비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되므로 재정민주주의 측면에서 가급적 규모를 축소할 필요
- 전체 기금의 차입금 · 채권발행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규정할 필요
 - 「국가재정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채권 발행 및 차입금 한도액만을 예산총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 2012년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11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1조원, 외화 외평채 10억달러 등이 규정되어 있음

〈예산총칙에 규정된 차입금 및 국채발행 한도액 변화 추이〉

(단위: 조원, %)

	2010	2011 (A)	2012(안)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국민주택기금	11.3	11.5	11.0	-0.5	-4.3
공공자금관리기금	80.7	82.5	81.0	-1.5	-1.8
외국환평형기금	20억달러	10억달러	10억달러	0	0

- 그러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의 차입금 및 채권발행 한도액(2012년 계획안 기준 총 9조 7,518억원)도 예산총칙에 규정함으로써 전체 회계 · 기금의 차입금 및 채권발행 한도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심의 ·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²⁾
 - － 비록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 채무가 국가채무의 포괄

2) 현재는 각 기금별 기금운용총칙에 차입금 및 채권발행 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예산총칙에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범위에서 제외되고는 있으나, 「국가재정법」이 예산총칙에 차입금 및 채권발행 한도액을 규정하도록 한 취지는 국회가 승인하는 전체 차입금 및 채권발행 한도액 규모를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이를 총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의 2012년도 차입금 및 채권발행 한도액(안)〉

(단위: 억원)

기 금 명	일시차입금	차입금 · 채권발행 한도액
신용보증기금	3,000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58,000
공무원연금기금	—	2,268
무역보험기금	—	5,00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29,250
합 계	3,000	94,518

□ 예산의 집행시기 및 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예산총칙 규정 필요

- 「국가재정법」 제20조제1항제3호는 “예산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예산 총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는 관례적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면서 “부대의견” 형식으로 예산 집행 시기나 조건 등을 규정
 - 2011년의 경우 예산의 지원 기간이나 대상에 대한 부대의견 11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산을 집행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 등 총 12건이 채택된 바 있음

〈최근 국회의 예산 부대의견 채택 추이〉

(단위: 건)

유형별 구분	2009		2010	2011
	본예산	추경		
제도개선	41	9	4	—
국회보고	7	3	1	—
집행조건설정	3	4	11	11
집행유보	5	1	1	1
합 계	56	17	17	12

- 주: 1. 제도개선: 정책방향 제시 또는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 내용
 2. 국회보고: 제도개선사항 또는 사업수행 내용에 대한 국회보고를 의무화한 내용
 3. 집행조건설정: 예산 지원 기간, 대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한 내용
 4. 집행유보: 부대의견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내용

- 부대의견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고 예산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형식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예산총칙에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재정의지를 예산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다만, 총칙은 예산 전반에 관한 총괄적 규정이므로 이러한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관련 내용은 총칙에 규정하되, 국회 보고나 제도 개선 등의 기타 사항은 현행과 같이 부대의견 형태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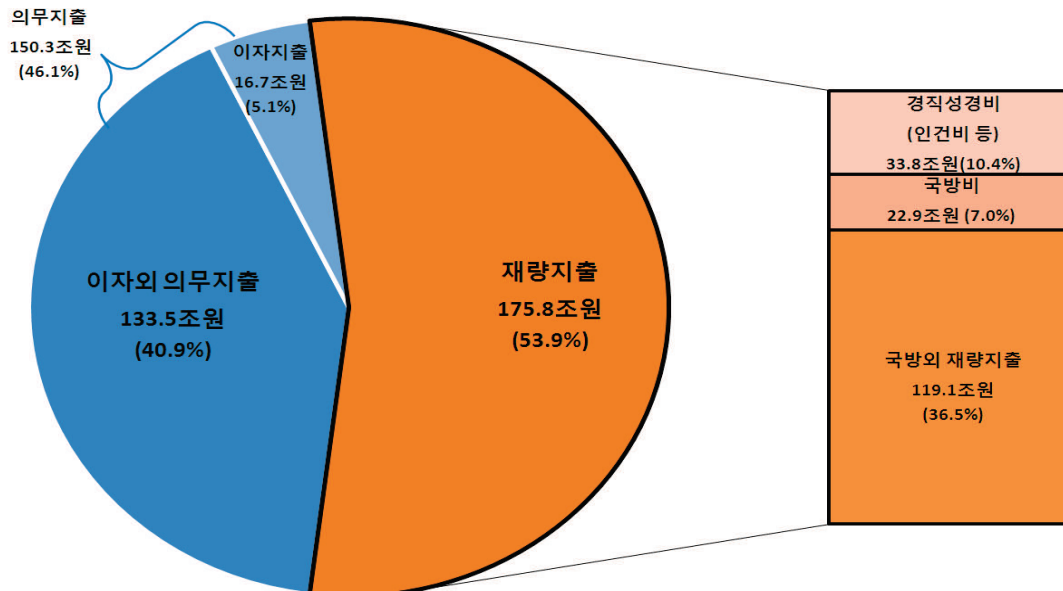
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1) 지출구조와 예산안 심사

- 2012년 총지출(326.1조원)은 의무지출 150.3조원(46.1%)과 재량지출 175.8조원(53.9%)으로 구성
 - 의무지출은 재정수반법률에 의해 직접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지출과 이자지출로서, 규모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
 - 국회가 예산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예산규모를 조정하는 주된 영역이 재량지출

- 재량지출 중에서도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중앙관서의 필수적인 유지·운영을 위한 경직성 경비

〈2012년 총지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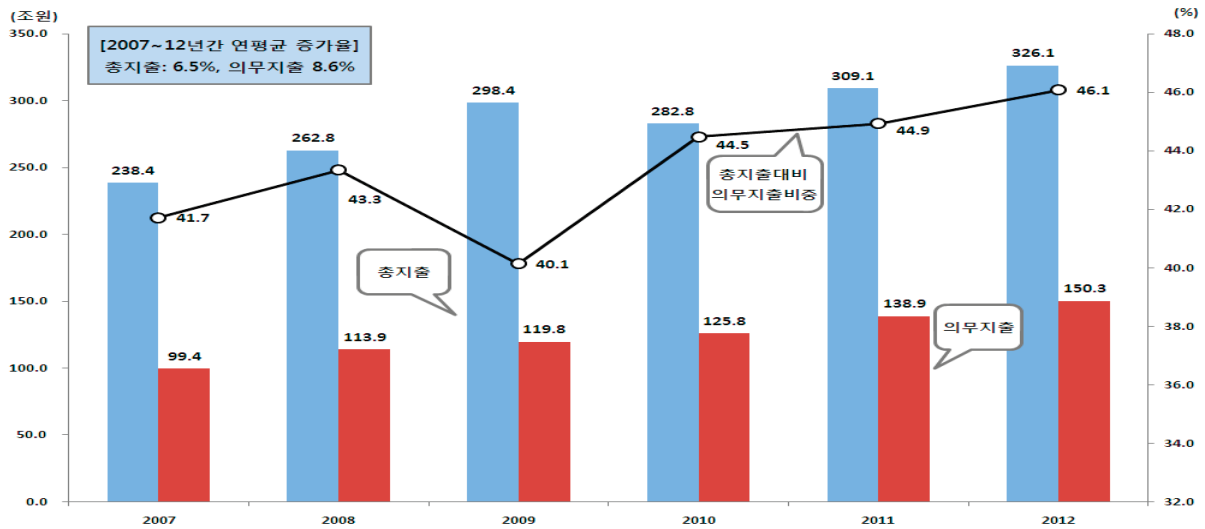


- 주: 1. 의무지출 등의 규모는 잠정치
 2.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중앙관서 유지·운영 경비
 3. 이미 예산이 승인된 사업의 계속 비용(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등)
 4.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지출(33.2조원)에서 인건비(9.0조원), 기본경비(0.3조원), 의무지출(1.0조원, 건강보험 등) 제외
 5. 공자기금(외평채 이자상환 제외), 공무원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상환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비중은 2007년 41.7%에서 2012년 46.1%로 꾸준히 확대
 - 의무지출 예산은 2007년 이후 연평균 8.6%씩 증가하여, 정부 총지출 증가율 6.5%보다 1.3배 빠른 속도로 증가
 - 교부금과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전체 의무지출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되어 조정되나,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의 규모조정은 상당히 제약적

〈정부 총지출 vs 의무지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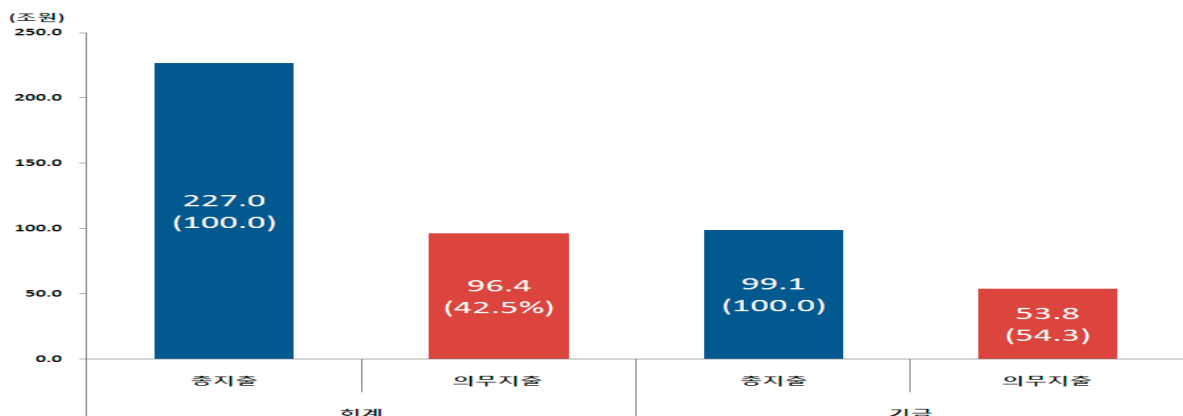


주: 1. 2007~2011년은 결산기준이며, 2011년은 최종예산, 2012년은 예산안 기준
2. 국회예산정책처, 나라살림(기획재정부 각년도)

□ 회계·기금별 의무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 회계(일반회계·특별회계)의 의무지출은 96.4조원으로, 회계 총지출의 42.5%를 점유
- 기금에서 집행되는 의무지출은 53.8조원으로 기금 총지출의 54.3%를 점유하고 있음
- － 4대 공적연금의 각종 급여가 기금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기금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점유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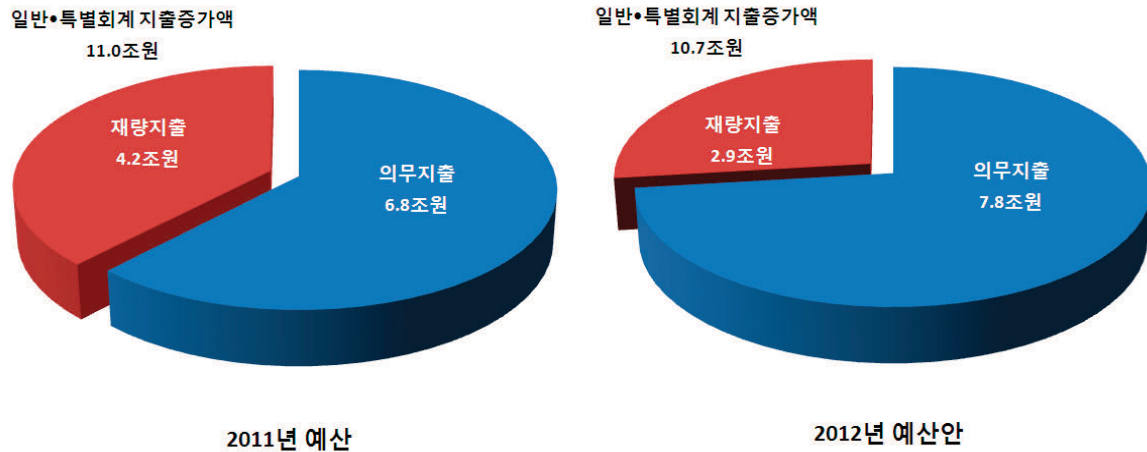
〈회계·기금별 의무지출 구조〉



□ 201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은 10.7조원 증가하였는데, 이중 의무지출이 7.8조원(72.9%), 재량지출 2.9조원(27.1%)

○ 2011년 회계의 지출증가분 중 의무지출 비중은 61.8%, 재량지출 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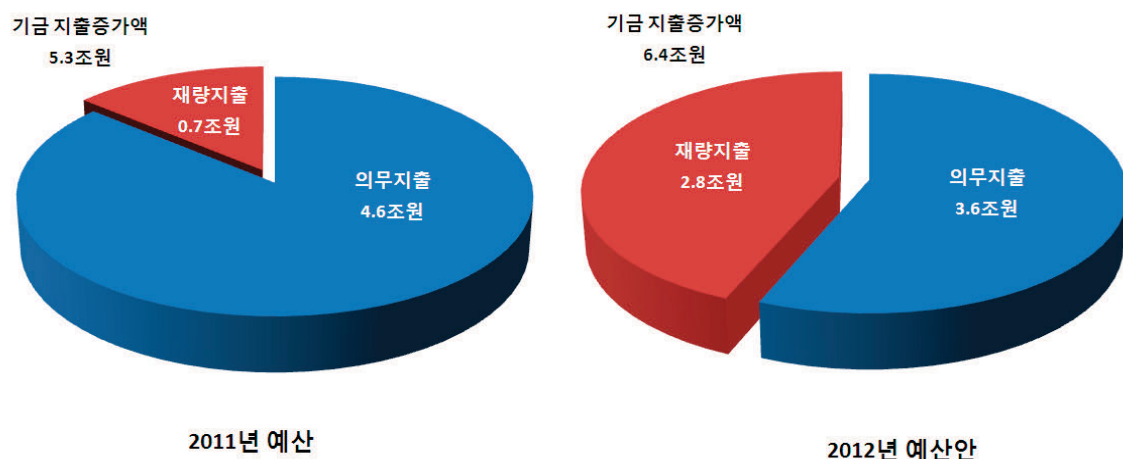
〈회계(일반회계·특별회계) 지출증액 구조 분석〉



□ 2012년 기금 지출은 2011년에 비해 6.4조원 증가하였는데, 이중 의무지출이 3.6조원(56.2%), 재량지출 2.8조원(43.8%)

○ 2011년 기금지출 증가분에서 재량지출의 점유비중은 13.2%였으나, 2012년 들어 43.8%로 크게 확대

〈기금 지출증액 구조 분석〉



- 예산국회의 심의는 지출구조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는데
- 첫째,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계속비 등(31.5조원)을 제외한 비경직성 경비인 142.0조원(43.5%)의 사업비에 대한 정책적인 타당성과 편성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데 집중될 것이며
- 둘째, 법률상 지출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편성규모의 정확성 등이 심사의 관건이 될 것임
 - 최근 데이터에 근거한 기초변수 적용 등 추계의 적정성
- 2012년 의무지출 증가분 11.4조원 중 교부금(6.0조원, 53.1%)과 보건·복지·노동(4.6조원, 40.1%)부문이 증가세를 주도
 -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2012년 예산안 증가분 9.2조 중 재량지출 증가분은 4.6조원
 - 교부금(지방재정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되는 구조로 내국세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9.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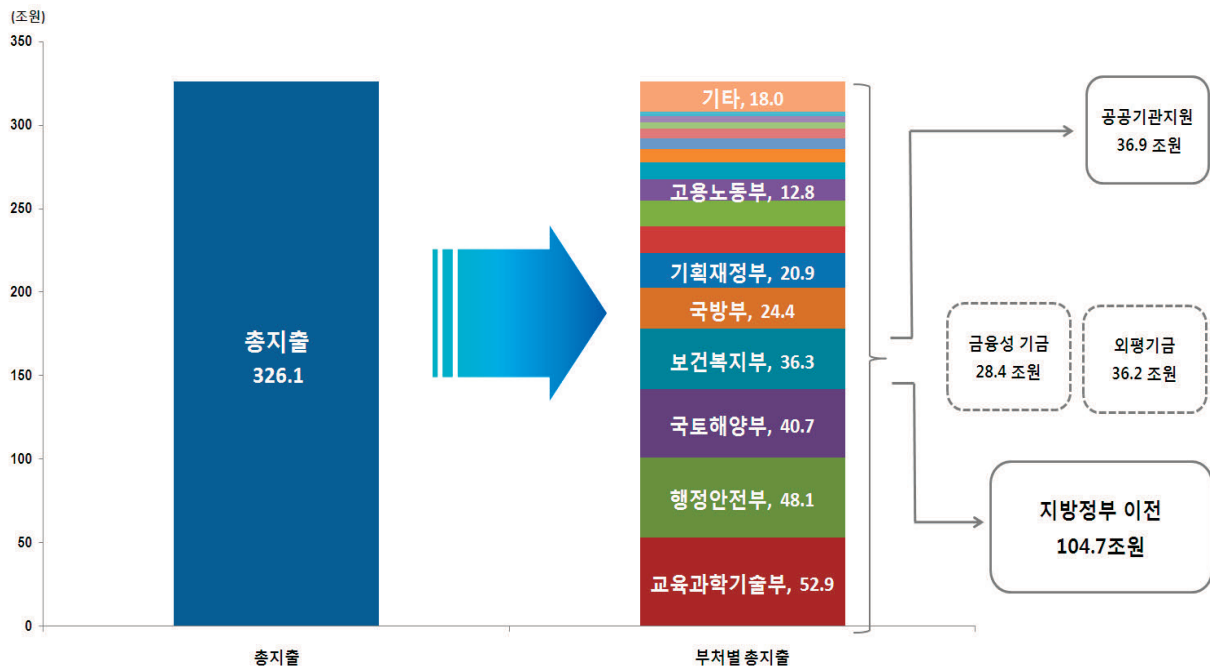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차이〉

위 원 회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안	증 감	
				증감액	증가율
교 부 금	59.7 (47.4)	65.5 (47.2)	71.5 (47.6)	6.0 (53.1)	9.2
보건·복지·노동	48.9 (38.9)	53.2 (38.3)	57.8 (38.5)	4.6 (40.1)	8.6
이자지출	13.4 (10.7)	16.5 (11.9)	16.7 (11.1)	0.3 (0.3)	1.7
기 타	3.8 (3.1)	3.7 (2.6)	4.2 (2.8)	0.5 (0.5)	13.7
합 계	125.8 (100.0)	138.9 (100.0)	150.3 (100.0)	11.4 (100.0)	8.2

다. 세출 예산안의 흐름도

- 2012년 326.1조원 규모의 총지출은 소관 부처의 사업비로 배분되는데, 부처별 지출규모를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52.9조원, 행정안전부 48.1조원, 국토해양부 40.7조원, 보건복지부 36.3조원의 순서임
- 정부 지출이 이전되는 양상을 보면,
-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정은 7.1% 증가한 104.7조원
 - 지방교부세 33.1조원(2.9조원 증가), 국고보조금 33.2조원(0.8조원 증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5조원(3.2조원 증가)
 - 공공기관 지원 예산은 36.9조원이며,
 - 총지출에서 제외되는 금융성기금 및 외평기금 운용규모는 64.6조원임

〈세출 예산안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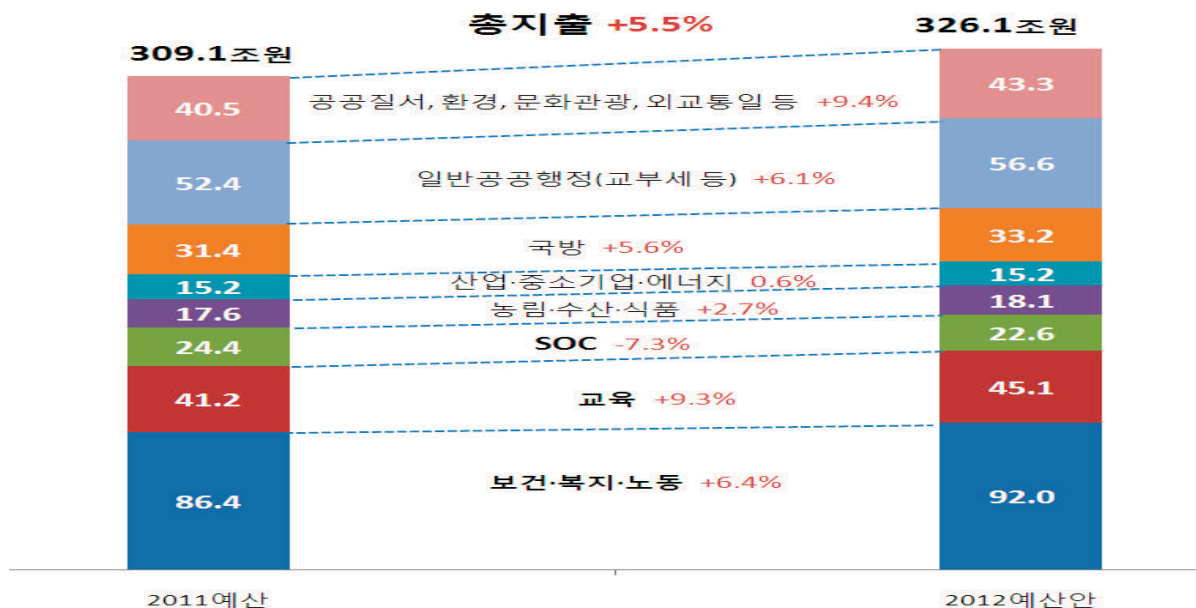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원배분의 특징 및 평가

1. 재원배분의 특징

〈분야별 재원배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복지 분야의 지속적 증가’ vs ‘SOC 분야의 감소’ 가 대비
 -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총지출의 28.2%에 해당하는 92.0조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
 - － 복지예산의 증액(5.6조원)은 연금 3.2조원, 주택 0.9조원, 의료보장 0.6조원 등에 기인
 - SOC 분야는 총지출의 6.9%에 해당하는 22.6조원으로 전년대비 7.3% 감소
 - － SOC 분야는 12개 분야 중 유일하게 감소한 분야로서, 2012년도 완료되는 4대강 사업 및 여수박람회 등을 제외한 예산안은 22.2조원으로 전년 대비 6.1%(1.3조원) 증가
 - － 도로부문은 1.0% 증가한 반면, 철도부문은 11.8% 증가

□ 교육 및 R&D 분야 예산의 증가

- 교육 분야 예산안은 45.1조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하였으며,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음
 - －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전년 대비 3.2조원(9.1%) 증가
 - － 평생·직업교육 부문과 교육일반 부문이 각각 29.0%, 0.9% 감소한 반면, 고등교육 부문은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증액(1.2조원)에 따라 18.1% 증가
- R&D 분야 예산안은 16.0조원으로 전년대비 7.3% 증가
 - － 우주항공·건설교통 부문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한국형발사체 개발 등 국책사업 예산의 증가로 전년 대비 42.0% 증가
 - －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대형국책사업, 기초·원천연구에 지원을 집중하는 재원배분 방향에 따라 기계·제조·공정 부문은 전년 대비 8.0% 감소

2. 평가

□ 복지 분야

- 연금 부문의 지출 증가에 기인한 복지예산의 증가는 서민층의 체감과 거리가 있는바, 전통적 영역의 복지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복지분야의 의무지출에 대하여는 총액 수준의 관리 뿐만 아니라 사업별 편성내역의 적정성에 대하여도 세밀한 검토 필요

□ SOC 분야

- 도로 대비 철도 투자비중은 개선('06년 1.61:1 → '12년 1.23:1)되었으나, 민자사업 투자분 등 도로부문에 속하지 않는 도로투자 규모를 감안할 필요
 - － 산업단지 부문에 편성된 진입도로 사업비가 4.0% 증액된 8,564억원
- 고속도로 건설예산이 21.3% 증가하였는바, 철도와의 대체성, 낙후지역·대도시권 혼잡 개선 사업과의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교육 분야

- 국가장학금 지원사업(1.5조원)과 관련하여 장학생 선발 기준, 대학별 자구 노력에 따른 재원 지급 방안 등이 미정인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사시 제출할 필요

□ R&D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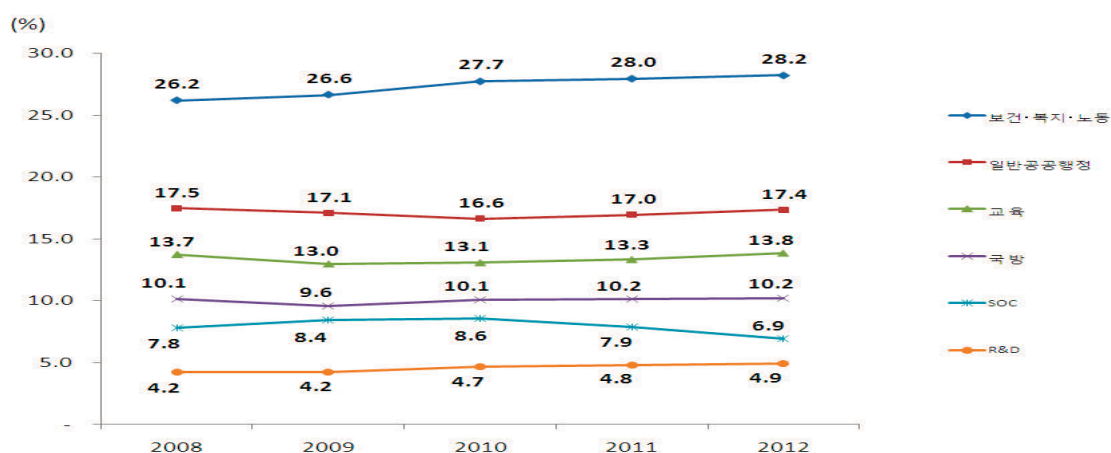
- 정부 R&D 예산의 규모 및 GDP 대비 비중이 세계 상위권에 해당하는바, 투자효율성을 감안한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 － R&D 예산은 주요국 중 6위, GDP 대비 비중은 4위('11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민간 R&D 투자 및 각 부처간 중복 투자 축소 등 R&D 투자 효율화 필요

3. 분야별 자원배분의 추이 및 국제비교

□ 자원배분 추이

- 2008년 이후 보건·복지·노동 분야와 R&D 분야의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총지출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SOC 분야의 경우 총지출 대비 비중이 2010년 8.6%까지 증가하였으나 4대강 사업의 완공에 따라 2012년 6.9%까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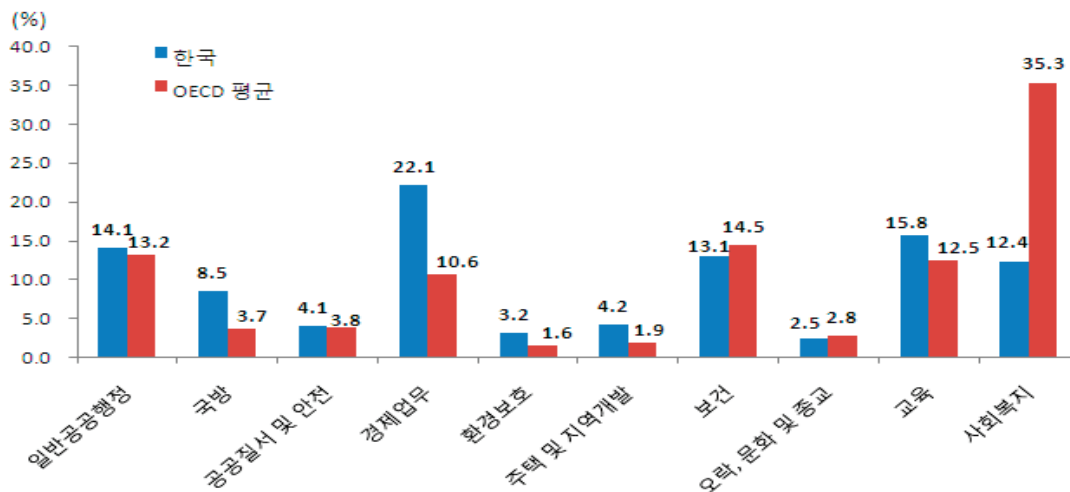
〈분야별 자원배분〉



□ 재원배분의 국제비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합한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지출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분야별 비중을 OECD 평균과 비교하면, 국방, 경제업무, 주택 및 지역개발, 교육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³⁾
 - － 우리나라 국방 분야의 비중은 8.5%로 OECD 평균(3.7%)의 2.4배에 이르는 반면,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은 12.4%로 OECD 평균(35.3%)의 약 1/3 수준
 - － 주요국의 1인당 GDP가 27,000달러 내외(구매력 기준)인 경우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업무와 교육 분야의 비중이 각각 22.1%, 15.8%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복지 비중(12.4%)은 미국(20.1%)과 함께 낮은 편에 속해 있음

〈분야별 비중의 국제비교〉



주: 1. 2009년 일반정부(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포함) 기준이며, COFOG 분류에 따른 것임
 2. OECD 평균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등 8개 국가를 제외한 28개 회원국가의 평균임

자료: OECD, Stat(2011.8)

3) OECD는 정부지출을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공공행정(General public services), 국방(Defense), 공공질서 및 안전(Public order and safety), 경제업무(Economic affairs),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주택 및 지역개발(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보건(Health), 오락·문화 및 종교(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교육(Education), 사회복지(Social protection) 등 10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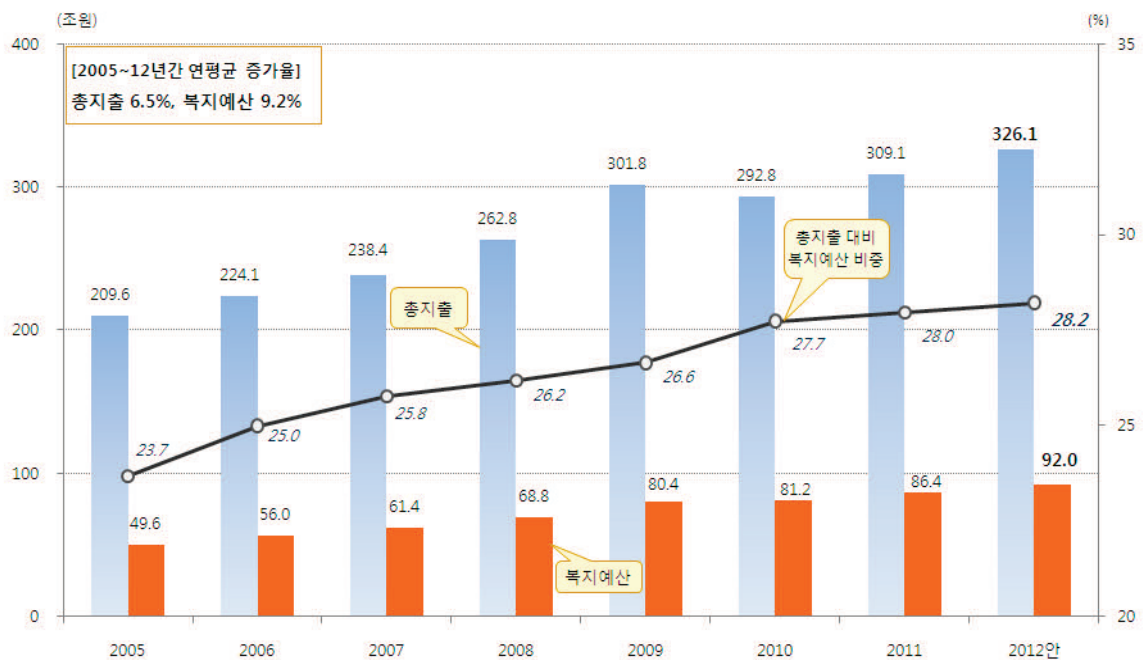
분야별 자원배분의 주요 쟁점

1. 복지 예산안

가. 현황과 특징

-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 예산안⁴⁾(복지 예산안)은 금년보다 6.4% 증가(5.6조 원 증액)한 92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28.2%를 차지
- 복지예산은 2005년 이래 연평균 9.2%씩 증가하여, 정부 총지출 증가율(6.5%)과 비교할 때 1.4배 속도로 늘어남

〈정부 총지출 vs 복지예산 비교〉



주: 2005~'11년은 최종예산, 2012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나라살림(기획재정부, 각년도), 2012년 예산안(대한민국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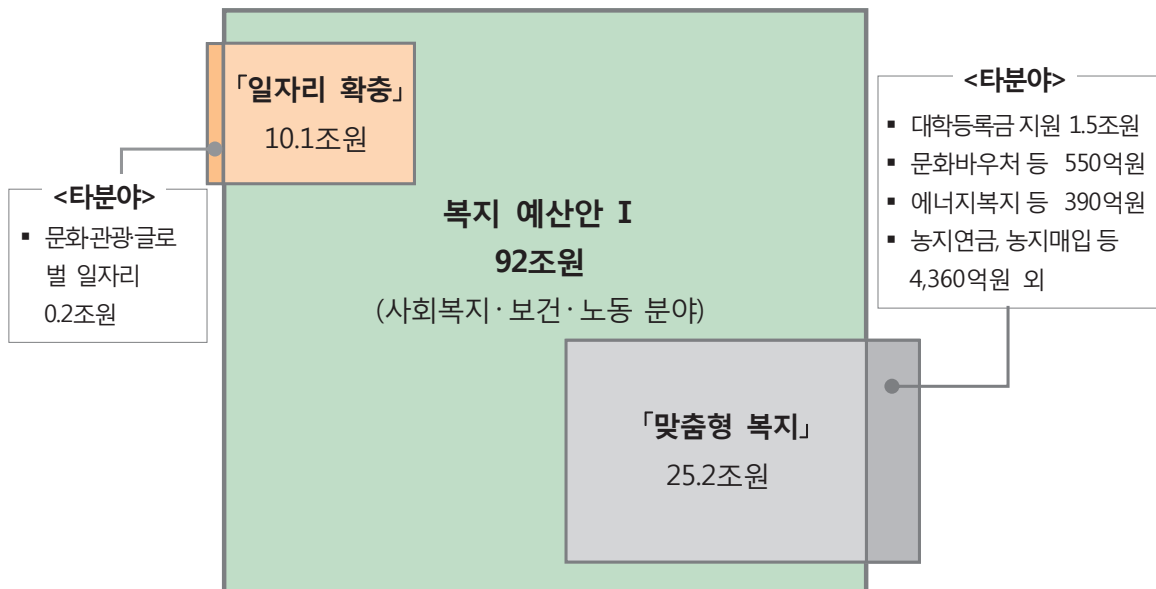
4) 동 명칭은 「2012년 예산안 개요」(대한민국정부)에 따름. 단,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가 이에 해당되며, 통상 이를 합하여 복지예산이라 함

- 2012년 복지 예산안은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에 역점을 둔 것으로 강조되는데, 동 범주는 기존의 복지 분야 예산범주를 넘어 **교육, 에너지, 문화, 농림 분야 등에 속한 유관 생활복지 예산**을 포괄함
 - － 「일자리 확충」 예산은 문화관광 분야 일자리 약 2천억원 포함
 - － 「맞춤형 복지」 예산은 대학등록금 지원(국고 1.5조원), 에너지복지(390억원), 농지연금·농지매입·농어업재해보험(4,360억원) 등 포함
- 이렇게 볼 때, 2012년 복지 예산안은 2가지 유형으로 파악됨

(현행 분류) 복지 예산안 I	92조원	기초생활보장, 아동·노인·장애인, 공적연금, 보육·가족, 노동, 보훈, 주택, 보건 의료, 건강보험 지원 등(2개 분야, 12개 부문)
(현행 분류 + 유관예산) 복지 예산안 II	92조원 + α (α = 약 2.2조원)	기존 복지 예산 외, 교육, 문화, 에너지, 농림 분야에 속한 유관 생활복지 예산

주: α 는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 예산안(기획재정부 보도) 중 타 분야에 속한 예산을 추정하되, 국방 분야의 장병 치우개선은 제외

<2012년 복지 예산안과 역점 정책>



주: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 예산안 규모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름
 자료: 「2012년 예산안 보도자료」(기획재정부)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지출구조와 증액 양상

(1)지출구조

- 복지 예산안은 주택부문을 제외하면 73조원 규모인데, 이 중 의무지출이 58.8조원으로 80.5%를 차지하여, 지출구조가 매우 경직적임
 - － 주택부문을 제외한 이유는 OECD와 IMF가 분류하는 복지지출에는 우리나라의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같은 융자 위주의 지출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 의무지출 비중이 높으면 예산과정에서 지출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부담을 감안하여 복지지출의 적정성을 도모해 나가자면 입법과정에서 재정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2012년 복지 예산안 구조: 의무 vs 재량 지출〉

(단위: 조원)

복지예산 92조원		
복지예산(주택 19조원 제외) 73조원		
의무 지출 58.8조원(80.5%)		재량 지출 14.2조원(19.5%)
<주요 예산사업>	<주요 사회보험사업>	
기초생활 급여 7.0	연금 급여 26.8	재정지원 일자리 2.5
기초노령연금 3.0	구직급여 모성보호 등 4.1	직업능력개발 1.2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0.4	산재급여 등 4.0	고용장려금 1.2
보육료 지원 2.0	(이상 보험사업비 34.9조원: a)	시설 운영 지원,
보훈보상금 등 3.4	건강보험 지원 6.0	돌봄 서비스 등
(이상 15.8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0.5	
	(이상 국고지원 6.5조원: b)	
	▶ a+b = 41.4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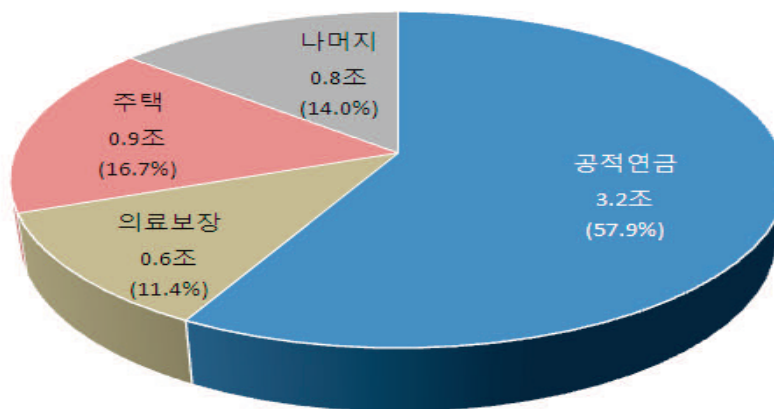
주: 규모는 총지출 기준이며, 의무지출 여부는 예산정책처 내부기준에 준함(복지분야 이자지출은 의무에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증액 양상

- 예산의 증액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는 예산심사에서 주요한 사항인데, 첫째, 복지예산안의 증액(5.6조원)은 연금 3.2조원, 주택 0.9조원, 의료보장(의료급여, 건보·장기요양보험 지원) 0.6조원으로, 이상 3개 영역(4.8조원 증액)에 증가 총액의 86%가 편중되어, 나머지 예산은 0.8조원 증액(14%)에 그침
 - － 연금과 의료보장 지원액 증가는 고령화와 직결되는 지출임
- 나머지 예산증액(0.8조원)도 구체적으로 보면, 수급대상이 특화되어 있는 보훈과 보육이 각각 0.2조원씩 증액되어, 국민일반 가운데 취약계층에 속한 대상 등을 위한 예산증액(의료급여 제외)은 0.4조원으로 미미함

〈2012년 복지 예산안 증액(5.6조원) 양상〉



자료: 「2012년 예산안」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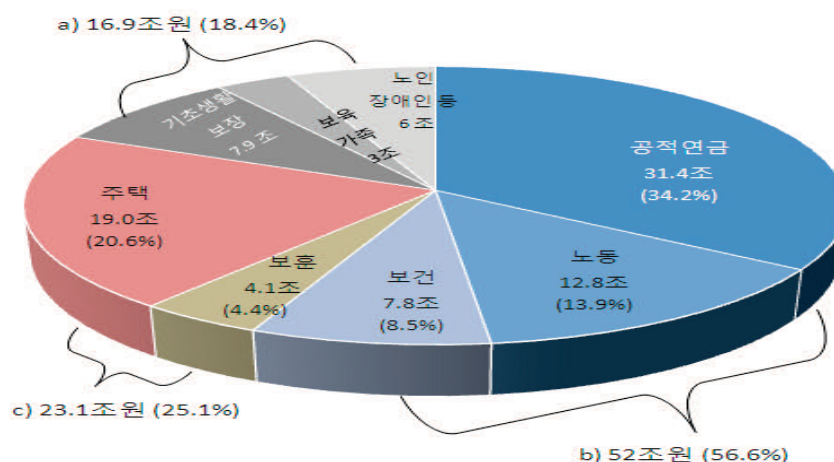
- 둘째, 예산의 증액 양상을 의무지출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앞서와 같이 주택부문을 제외할 경우, 복지 예산안 증액분은 총 4.6조원인데 이중 90.5%인 4.2조원이 의무지출사업에서 증액됨
 - － 이 규모가 예산과정과 거의 무관하게 이미 정해진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복지예산의 자동 증가분임

다. 검토 방향

(1) 복지 분야 세출예산의 적정성 문제

- 매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마다, 국정의 여러 분야 중 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보다 높고, 비중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하지만, 서민들의 체감 복지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일면이 있음
 - －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2005년 23.7% → 2010년 27.7% → 2012년안 28.2%
-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첫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 분야에서 기금(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복지재원의 약 70%)이 아니라, 예산(일반회계 등)으로 지출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사업에 상대적으로 과소한 재원이 배분된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
 - －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포함), 노인·장애인·아동 복지, 보육 등 주로 세출예산으로 운용되는 취약계층 지원(그림 a)에 16.9조원(18.4%) 배분
 - * 이 중에서도 보육(2.7조원)을 제외한다면, 동 예산은 14.3조원(15.5%) 수준
 - － 반면, 주택·보훈(그림 b)에 23.1조원(25.1%), 공적연금·노동·보건(그림 c)에 52조원(56.6%)으로, 합하면 75.1조원(81.7%) 배분

〈2012년 복지 예산안(92조원) 구성〉



자료: 「2012년 예산안」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둘째, 영역별 증가율 비교를 통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취약계층을 위한 핵심정책인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의 예산 증가율이 3.2%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5%)보다 2.3%p나 낮음
 - － 복지예산 운용에 관련된 10개 부처 중 대표적인 보건복지부 예산은 국민연금 34.5%, 의료보장(의료급여, 건보 지원 등) 28.8%, 보육 7.3%로 배분되며(합하면 70.8%), 나머지 29.2%인 10.7조원이 공적부조와 복지서비스를 위한 몫임
- 요약하면, 근년에 복지예산 증가를 주도하는 부문이 연금인데, 이는 자격이 부여된 수급자에 한정되어 이로 인한 예산 증가는 서민층의 체감과 거리가 있으므로, 빈곤문제 등 소득격차 발생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운용되는 복지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

〈예산 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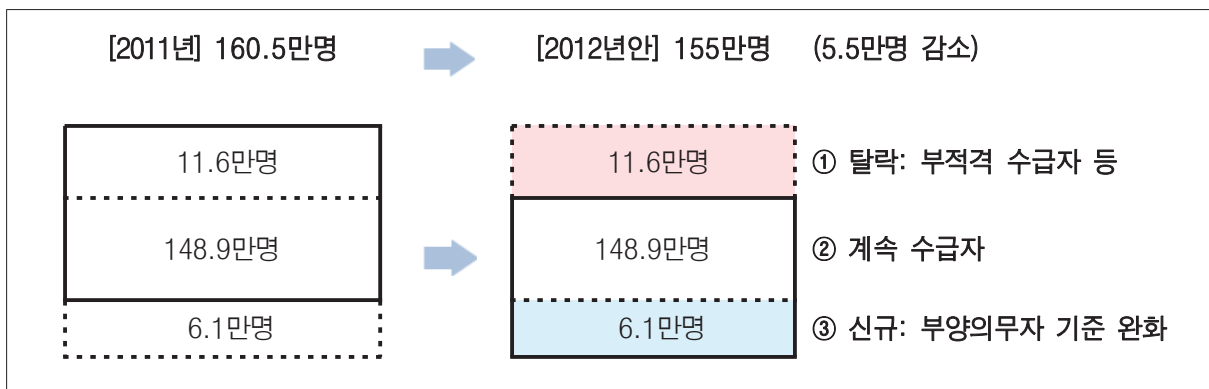
	예산안 규모 (조원, %)	증가율(%)	
		2010~11년간	2011~12년간
정부 총지출	326.1	5.5	5.5
보건·복지·노동 분야	92.0	6.3	6.4
보건복지부 총지출(a)	36.3 (100.0)	8.2	8.3
－ 국민연금(b)	12.5 (34.5)	13.9	15.0
－ 의료보장 지원(c) ¹⁾	10.5 (28.8)	6.2	6.5
－ 보 육(d)	2.7 (7.3)	16.5	7.0
－ 보건복지부의 나머지 지출: a-(b+c+d) (생계급여 등,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보건의료사업, 복지일반 등)	10.7 (29.2)	3.0	3.2

주: 1. 의료급여, 건강보험 지원,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포함

(2) 기초생활 수급자수 산정의 적정성

-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부문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⁵⁾하여 6.1만명이 신규 수급자로 편입되는 정책변화가 있음
- 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은 7조 9,023억원인데, 이중 기초생활급여비(생계급여 등 5종 급여)는 3조 2,915억원으로 금년보다 1,636억원 감소됨
- 기초생활급여비가 감소한 이유는 신규 수급자의 발생(6.1만명)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급자가 11.6만명 탈락하여, 2012년 수급자 수는 금년보다 5.5만명 감소한 155만명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임
 - － 수급자 수가 감소한 것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을 통해 소득조사 등 정보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자가 적발된 데 따른 결과로 알려짐⁶⁾
- 복지예산의 누수와 비효율을 제거하여 재정 성과를 도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공적이전제도를 통해 소득 불평등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효과가 OECD 국가 중 가장 미흡하고, 노인빈곤율도 OECD 최고 수준임을 감안하여, 빈곤층에 대한 적정지원이 검토되도록 함

〈기초생활 수급자의 변동〉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185% 미만으로 상향 조정

6) 사통망 구축에 따라 2011년에 기존 수급자가 2.7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1년 7월 말 현재 예상치의 2.3배인 6.2만명 감소(155→148.8만명)

(3) 10조원을 상회하는 의료보장 예산안의 심의자료 부재

- 의료급여, 건강보험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을 포괄하는 **의료보장 지원 예산안**은 금년보다 6.5% 증가한 10조 4,805억원으로, 복지부 총지출에서 28.8%를 차지하는 큰 규모임
 - － 재원은 예산 9조 4,174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 631억원으로 운용
 - － 특히, 기금(국민연금 등)을 제외하고 보건복지부 소관의 예산(21조 7,375억원)만 보면, **의료보장 지원 예산 비중은 43.3%에 이릅니다**
 - 이중 **의료급여비는 3조 9,818억원으로 8.4% 증가하는데**, 이는 생계급여 등의 **기초생활급여비**(5종 급여, 3조 1,279억원)를 8,539억원이나 **상회하여**, 의료급여의 과잉지출과 관리소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 의료보장 지원은 필수지출이지만,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집중적인 정책혜택 누림
 - 의료보장 국고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를 두는데, 건강보험 등이 예산 외로 운용되어 **지원액 편성근거인 보험료수입과 급여비지출 계획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으므로**, 동 예산안의 적정성은 제대로 심의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 의료급여 예산안은 전년도 미지급진료비 2,000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전년예산(3.7조원)이 적정진료에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분이 발생하였는지 검토 필요
 - － 건강보험 지원액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산출근거7)를 두는데, 보험료 수입이란 급여비 지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量出制入), 급여비 지출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없이 예산안에 대한 실질적 심의는 불가능하여, 매년 거의 원안 의결
 - 국회가 의료보장 예산을 정도 높게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면, 복지 예산 내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배분이 보다 확충될 수 있으므로, 동 예산
- 7)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며,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을 지원(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토록 규정하나, 동 조항은 모두 2011. 12. 31까지 효력을 가지므로, 예산안 의결에 앞서 법 개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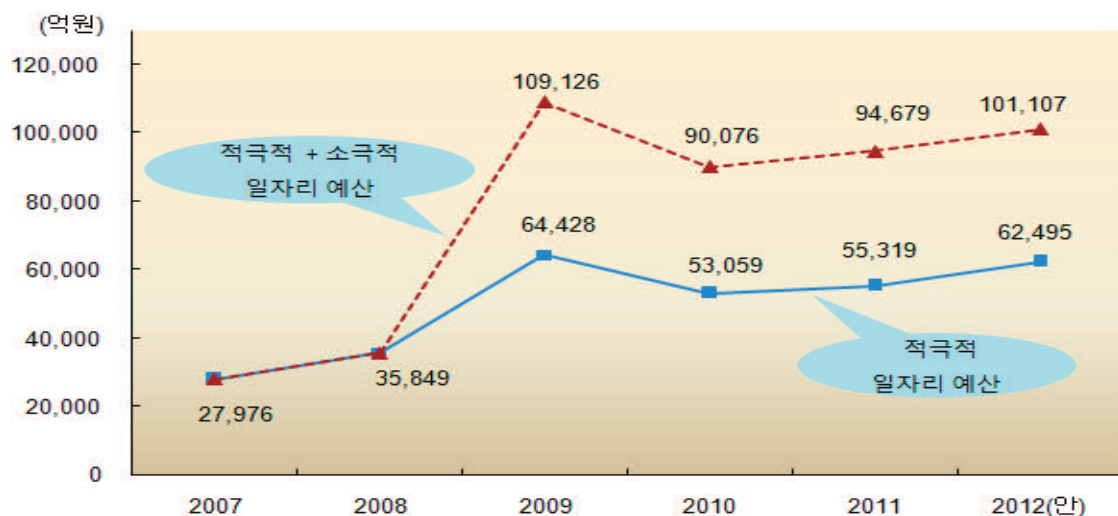
안의 실질적 심의를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이 가속되는 고령사회에서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한 방안이 될 것임

2. 일자리 예산안

가. 현황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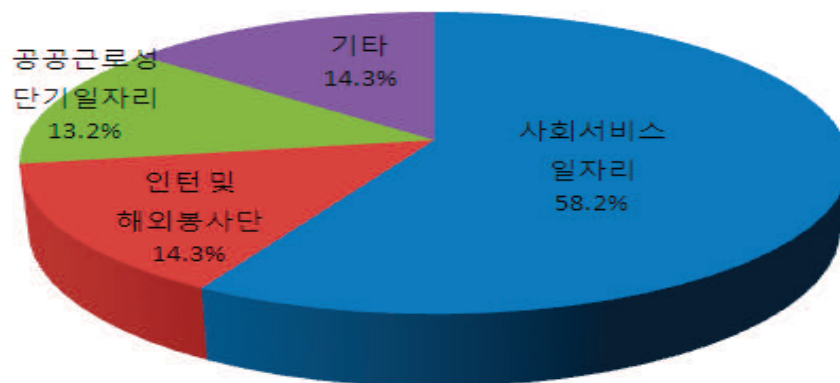
- 2012년도 일자리 예산안 규모는 2011년 대비 6.8%(6,428억원) 증가한 10조 1,107억원임
- 구직급여 등 소극적 일자리 예산은 3조 8,612억원으로 전년대비 1.9%(748억원) 감소한 반면, 적극적 일자리 예산은 6조 2,495억원으로 전년대비 13.0%(7,176억원) 증가함
 - － 적극적 일자리 예산: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 － 소극적 일자리 예산: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 * OECD는 소극적 일자리 예산을 제외한 적극적 일자리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구직급여 등 소극적 일자리 예산을 일자리 예산에 포함하고 있음

〈일자리 예산 추이(2007-2012)〉



- 직접일자리 예산 2조 5,026억원으로 전년대비 5.8%(1,375억원) 증가, 지원 인원은 56.2만명으로 2.1만명 증가
- 사회서비스 일자리 1조 4,575억원(58.2%), 인턴 및 해외봉사단 3,586억원(14.3%), 공공근로성 단기일자리 3,312억원(13.2%) 등임

〈직접일자리 예산의 구성〉



- 직접일자리 지원대상 인원 2.1만명 증가는 노인·장애인 지원인원 증가(2만명)에 기인함

〈직접일자리 예산 지원대상 인원수〉

	[2011년] 54.1만명		[2012년] 56.2만명	2.1만명 증가
청년	9.4만명	→	10.1만명	0.7만명
중장년 (여성·저소득층)	23.3만명	→	22.7만명	△0.6만명
노인·장애인	21.4만명	→	23.4만명	2만명

- 고용장려금은 1조 1,594억원으로 전년대비 23.7%(2,225억원) 증가한 바, 증가분의 96%(2,138억원)가 모성보호 관련 예산임

나. 검토방향

(1) 일자리 예산의 단계별 규모

- 상담·알선 단계의 고용서비스는 2.4% 감소한 반면, 취업·창업 단계의 직접 일자리는 5.8% 증가, 취업 후 고용유지 단계의 고용장려금은 23.7% 증가함

〈단계별 일자리 예산 구조〉

실업소득 유지	상담·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창업	고용유지
구직급여 등	고용서비스	교육·훈련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3조 8,612억원 (23.7%증)	3,701억원 (2.4%감)	1조 1,501억원 (0.3%증)	2조 5,026억원 (5.8%증)	1조 1,594억원 (23.7%증)

* 창업지원(4,096억원), 사회보험료 지원(670억원) 및 일부 단계별 중복예산 제외

- 공공근로성 단기적·임시직 위주의 직접일 자리를 확대하기 보다는 양질의 안정적·장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담·알선 등의 고용서비스와 교육·훈련 분야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OECD 국가들의 일자리 예산(2008년 기준)은 고용서비스(44.4%)와 교육훈련(25.0%)의 비중이 높은 반면, 직접 일자리 창출(10.7%)의 비중은 낮음

(2)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670억원(신규)

-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2012년 월 보수 약 124만원 수준)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을 각각 1/3씩 지원

* 2012년은 상반기 준비사업을 거쳐 하반기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연간 소요액은 2,297억원 추정

고용보험(임금근로자)]		[국민연금(임금근로자)]	
<가입자>	<미가입자>	<가입자>	<미가입자>
1,253만명		1,361만명	
20만명	51만명	17만명	42만명

*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

* 기존가입자 지원(고용보험 20만명, 국민연금 17만명), 미가입자의 50% 가입예상

□ 미가입자 보험가입 유인효과 미흡

- 정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102만명, 국민연금 미가입자 85만명 중 각각 50%가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추정
- 고용보험·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의 보험가입에 따라 근로자(월소득 124만원)는 연간 50만원, 근로자 4인 고용 사업주는 연간 210만원 추가부담
- 사업장이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전환되면, 근로자(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연간 42만원, 사업주는 연간 168만원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 기존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의 형평성 문제

-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에 따라 여타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3) 취업·창업 성공수당 및 고용장려금 : 청년인턴 취업성공수당 83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102억원, 고용장려금 5,009억원(모성보호 제외)

□ 취업 및 고용유지 유인효과 불확실

- 취업 또는 창업·창직시 구직자에 지급하는 성공수당은 취업·창업 유인효과가 불확실한 보너스 성격의 지원
- 일정기간 고용유지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장려금(모성보호급여 제외)은 고용유지 유인의 지속성이 부족함에 따라 동 재원을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의 민간위탁 규모 확대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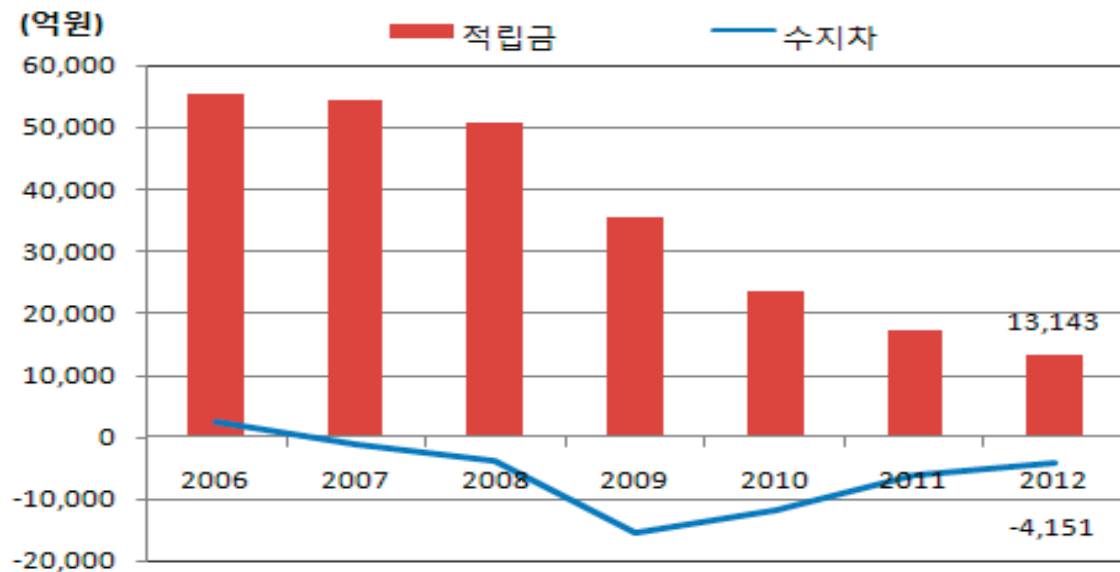
- 2012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최저생계비 150% 이하) 확대: 5만명 → 7만명
- 지원대상 7만명 중 고용센터 3만명(전년동일), 민간위탁기관 4만명(2만명 증가)
- 민간위탁기관의 규모·능력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확대보다는 고용센터를 통한 공공부문의 고용서비스를 확대할 필요

(4)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 : 2012년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 △4,151억원, 누적 적립금 1조 3,143억원

□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적자지속

- 2012년 고용보험기금 실업계정 적자 4,151억원, 누적적립금 1조 3,143억원 예상
- 2007년 이후 재정수지 적자 지속
 - － 지출대비 적립금 비율 0.3배 (법정비율 1.5배 ~ 2배)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



- 2012년 경제성장률 4.5%를 바탕으로 보험료 수입 및 구직급여 등 지출 편성
 - － 보험료 수입은 25.9% 증가한 3조 6,881억원, 구직급여는 2.5% 감소한 3조 2,924억원, 모성보호 관련급여는 48% 증가한 6,585억원으로 편성
 - － NABO 경제성장률 전망 3.5%를 가정하면 보험료 수입 감소 및 구직급여 증가 예상
 - － 2011년 모성보호 관련 급여 대상자가 급증(계획 전년대비 0.5% 증 → 전망 33.1% 증)한 것을 감안하면, 2012년도 급여대상자도 계획 (4.3% 증가) 대비 증가할 가능성
 - － 2012년 계획상 실업급여계정 적립금 1조 3,143억원의 추가적인 감소 가능성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에 따른 문제 : 관련 예산 54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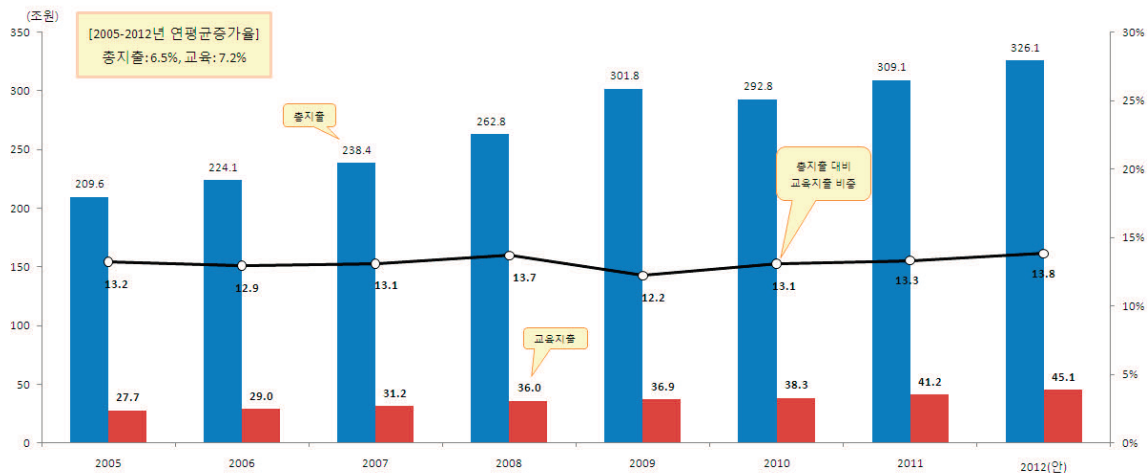
- － 50인 미만 고용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행에 따른 재정문제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지출 대비 보험료 저조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수지 적자(2012년 일반회계에서 20억원 보전)
- － 실업급여계정: 임의가입 방식으로 인한 역선택 문제(폐업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의 가입 비중 증가)

3. 교육 예산안

가. 현황과 특징

- 2012년도 교육 분야 예산안은 금년보다 9.3% 증가(3.8조원 증액)한 45.1조 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13.8%를 차지
- 교육분야 예산은 2005년 이래 연평균 7.2%씩 증가하여, 정부 총지출 증가율(6.5%)과 비교할 때 1.1배 속도로 늘어남
 - － 2009년의 경우 추경 편성에 따라 정부 총지출은 증가하였으나, 세입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감액되면서 정부 총지출 대비 교육 분야 비중이 낮아짐
- 2012년 정부 총지출에서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3.8%로 2009년(12.2%) 이후 높아지는 추세임

〈정부 총지출 vs 교육 예산 비교〉



주: 2012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각 년도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년대비 3.1조원(8.8%) 증가하였으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전년대비 3.2조원(9.1%) 증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정 교부율(내국세의 20.27%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증액되며, 만 5세 공통교육과정 도입(1조 1,388억원)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할 경우 교육 분야 증가액은 6,351억원이며, 고등 교육 분야의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1.5조원) 신설로 타 부문은 전년대비 감소

〈2012년도 교육분야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11 예산	2012 예산안	증가액	증가율
교육분야	412,316	450,658	38,342	9.3
유아 및 초중등교육 (국비)	354,823	386,072	31,249	8.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92	1,249	-743	-37.3
고등교육	35,2831	384,822	31,991	9.1
평생·직업교육	49,724	58,716	8,992	18.1
교육일반	6,514	4,627	-1,887	-29.0
교육일반	1,254	1,243	-11	-0.9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1. 10

나. 검토방향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하향조정 검토 필요
- 정부 총지출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이나,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다만,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 여건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할 필요

〈총지출 대비 교육 분야 재정 현황〉

(단위: 조원, %)

	2010		2011		2012	
		비중		비중		비중
교육 분야	38.3	13.1	41.2	13.3	45.1	13.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3	11.0	35.3	11.4	38.5	11.8
정부 총지출	292.8	100.0	309.1	100.0	326.1	100.0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초·중등 교육여건 비교〉

(단위: 명)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우리나라	OECD	우리나라	OECD
초등학교	24.1	16.4	30.0	21.6
중학교	20.2	13.7	35.3	23.9
고등학교	16.5	13.5	—	—

주: 2008년 기준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1. 10

□ 고등교육 부문: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시행계획 미비

-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진학 및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2년에 신설
-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1.5조원)은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3,313억원)이 개편된 것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실제 증액 규모는 1.2조원임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도입에 따른 국가장학금 체계의 변화〉

(단위: 억원)

	2011			2012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명	지원규모
저소득층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025	→	국가장학금 I·II 유형	15,000
	차상위계층 장학금	288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1,000			
	소 계	3,313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대통령 장학생(이공계)	85	→	대통령 학생(이공계)	65
	국가장학생(이공계·인문사회계)	913		국가장학생(이공계·인문사회계)	796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1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
	전문대학우수학생	96		전문대학우수학생	66
				대통령드림장학생	4
	소 계	1,095		소 계	930
근로장학사업		810	→	근로장학사업	810
합 계		5,218		합 계	16,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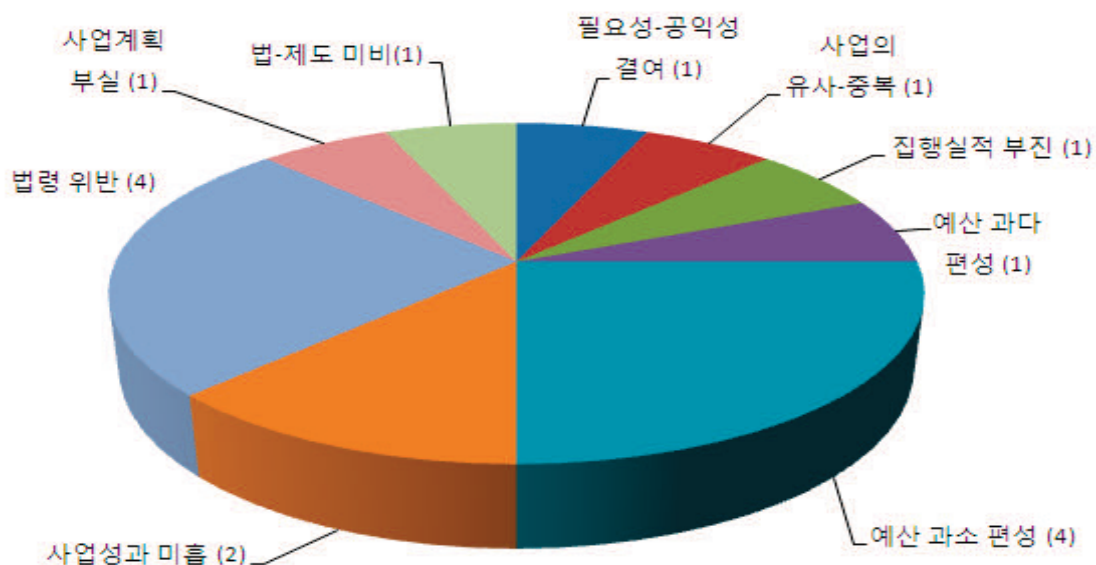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1. 10

- 국가장학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급할 계획이나 정부가 지급률을 정하지 않고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에 맞게 지원대상과 수준을 정하여 지원
 - － 7,500억원은 소득분위 3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소득 분위별 지급률에 따라 지원(유형 I)
 - － 나머지 7,500억원은 지원대상 대학의 재학생 중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비율에 따라 대학에 배분(유형 II)
- 장학생 선발의 기준이나 대학별 자구노력에 따른 재원 지급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이전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필요

□ 교육 분야 사업별 예산안 검토 결과

- 2012년 교육 분야 예산안 검토 결과 총 16건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함
 - － 세입 등의 예산 과소 편성 사례와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사례가 각각 4건,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이 2건, 필요성·공익성 결여, 사업의 유사·중복, 집행실적 부진, 예산 과다 편성, 사업계획 부실 및 법·제도 미비가 각 1건씩으로 분석됨

〈교육 분야 2012년 예산안 분석 결과의 유형별 분류〉



□ 사업별로 예산안 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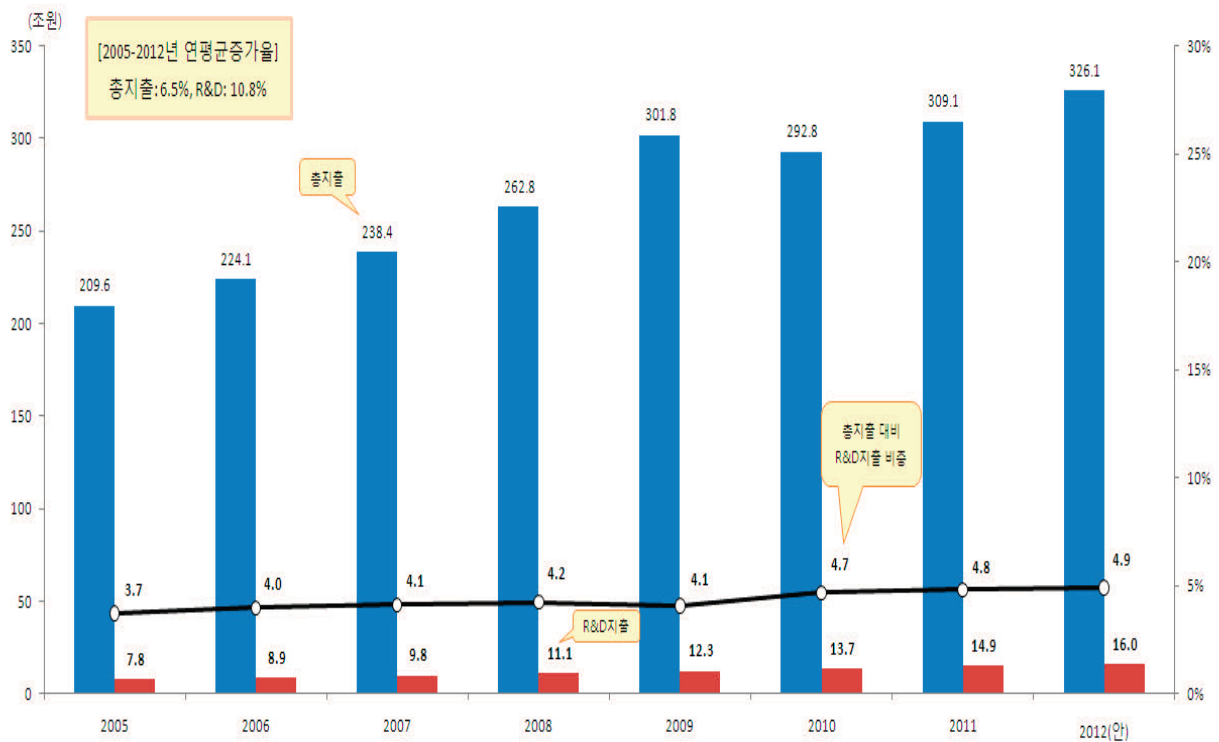
- 2012년 1월에 법인화되는 서울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사업에 포함된 Global 프로젝트(250억원)은 해외 석학 유치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이 과다 편성됨
- 학교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산학연협력활성화 지원 사업(285억원)은 정부 지원액 대비 매출액이 3배 이상인 학교기업 등 지원이 불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 축소가 바람직함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142억원)은 교과용 도서 및 보완자료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이나 집행이 부진하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학술원 기본경비(33.1억원)에 포함된 학술원 회원 수당은 법령에 따라 정액 수당(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2012년 예산안에는 법령 개정을 전제로 수당 인상(월 180만원으로 30만원 인상)을 반영한 것은 부적절함
- 토지대여료(6.2억원, 세입)은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세입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과거 징수결정액 추이를 감안할 때 과소 계상됨

4. R&D 예산안

가. 현황과 특징

- 2012년도 R&D 분야 예산안은 금년보다 7.3% 증가(1.1조원 증액)한 16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증가율(5.5%)보다 높음
- R&D 분야 예산은 2005년 이래 연평균 10.8%씩 증가하여, 정부 총지출 증가율(6.5%)과 비교할 때 1.7배 속도로 늘어남
- 정부 총지출에서 R&D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이며, 2012년에는 4.9%로 계획됨
- 정부 R&D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로 R&D 분야(16.0조원)는 2012년 예산안에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15.2조원)보다 큰 규모를 차지⁸⁾

〈정부 총지출 vs R&D 예산 비교〉



주: 2012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1. 10

□ 분야별로는 우주항공·건설교통 부문의 전년대비 증가액(6,617억원)과 증가율(42.0%)이 가장 높음

- 우주항공·건설교통 부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한국형발사체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증액이 많이 이루어짐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011년 100억원 → 2012년 2,100억원
 - 한국형발사체개발: 2011년 315억원 → 2012년 684억원
- 기초·나노·생명 부문: 개인기초연구, 줄기세포, 나노융합 등에 대한 투자 확대로 전년대비 5.0% 증가
 - － 개인연구: 2011년 7,500억원 → 2012년 8,000억원
 - － 줄기세포 연구개발: 2011년 601억원 → 2012년 1,004억원

8) R&D 분야는 각 분야에 포함된 R&D 사업을 별도로 집계한 것이므로, 각 분야에 포함된 R&D 사업은 해당 분야와 R&D 분야에 중복 집계됨

〈2012년도 R&D 분야 예산안〉

(단위: 억원, %)

	2011 예산	2012 예산안	증가액	증가율
기초·나노·생명 등	39,026	40,959	1,933	5.0
에너지·환경 등	22,835	24,448	1,613	7.1
우주항공·건설교통 등	15,740	22,357	6,617	42.0
기계·제조·공정 등	18,321	16,863	-1,458	-8.0
정보·전자	22,972	23,663	691	3.0
인력·장비구축 등	30,008	31,435	1,427	4.8
합 계	148,902	159,725	10,823	7.3

자료: 기획재정부, 2011. 9

- 우리나라의 정부 R&D 투자 규모 및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은 세계 상위권에 해당
 - 우리나라의 정부 R&D 예산은 주요국 중 6위에 해당하며,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은 주요국 중 4위에 해당

〈R&D 분야 예산 추이〉

(단위: 구매력평가기준 백만달러,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R&D예산	165,317	31,073	25,858	17,011	15,146	13,210	12,557	12,229
(순위)	1	2	3	4	5	6	7	8
GDP대비 R&D예산 비중	1.18	0.75	0.87	0.78	0.70	1.00	0.64	0.83
(순위)	1	17	8	15	18	4	21	10

주: 2009년 기준임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분석」, 2011. 8

나. 검토방향

- 정부 R&D 투자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1.0%)은 우리나라보다 정부 R&D 예산이 많은 나라 중에서는 미국(1.18%)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은 미국(1.18%), 핀란드(1.13%), 아이슬란드(1.06%), 우리나라(1.00%)의 순임
 - R&D 투자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R&D 투자의 효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논문 발표 건수는 세계 11위권이나,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세계 30위권에 불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단위: 건수, %)

		2005	2006	2007	2008	2009
과학기술논문 발표 건수	논문 발표수	27,806	28,425	27,367	35,573	38,651
	세계 점유율	2.83	2.89	2.79	3.07	3.24
	세계 순위	11	11	12	12	11
5년 주기별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	피인용횟수	2.79	2.93	3.1	3.29	3.47
	세계순위	30	31	31	30	30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 R&D 투자의 경제적 성과로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액 대비 기술도입액의 비율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추이〉

(단위: 백만달러)

	기술수출	기술도입	기술무역수지	기술무역규모	기술무역수지비
2001	619	2,643	-2,024	3,262	0.23
2002	638	2,721	-2,083	3,360	0.23
2003	816	3,236	-2,420	4,053	0.25
2004	1,416	4,147	-2,731	5,564	0.34
2005	1,625	4,525	-2,900	6,150	0.36
2006	1,897	4,838	-2,941	6,734	0.39
2007	2,178	5,103	-2,925	7,282	0.43
2008	2,530	5,670	-3,140	8,200	0.45
2009	3,582	8,438	-4,856	12,020	0.42

주: 기술무역수지비 = 기술수출/기술도입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2010. 12

- 특히 정부 R&D 예산 중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정보·전자 부문은 민간의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도 높은 분야이므로, 국가와 민간의 역할 구분 필요
- 민간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에 정부가 투자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우리나라 산업별 민간연구개발비 현황 (2009년)〉

(단위: 억원, %)

산 업	연구개발비	비중
농림수산업	204	0.1
광업	144	0.1
제조업	243,345	86.4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8,279	45.5
자동차 및 트레일러	35,325	12.5
코크스·석유·핵연료·화합물 및 화학제품·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26,414	9.4
기타 기계 및 장비	16,026	5.7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729	1.0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06	0.1
건설업	8,493	3.0
서비스업	26,537	9.4
합 계	281,659	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0. 11

- 또한 지식경제부 등 9개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16개 전문기관⁹⁾에서 국가 R&D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¹⁰⁾
 - － 연구기획을 수행하는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연구자로 참여
 - － 연구책임자 교체 및 실패 과제 등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 － 연구실패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을 부처별 자체 규정에 따라 다르게 운용 등
- 정부 R&D 예산 규모가 주요국 중 6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R&D 투자의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필요
 - － R&D 투자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 보다는 R&D 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 2012년 R&D 예산 증가율을 5.5%(총지출 증가율) 또는 3.5%(국회에 산정책처가 전망하는 2012년 경제성장률)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2012년 R&D 예산안 조정(안)〉

(단위: 조원)

	2011 예산(A)	2012 예산안(B)	1안: 전년대비 5.5% 증액			2안: 전년대비 3.5% 증액		
			조정안(C)	(C-A)	(C-B)	조정안(D)	(D-A)	(D-B)
R&D	14.9	16.0	15.7	0.8	-0.3	15.4	0.5	-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사업별로 예산안 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

-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에 포함된 중이온 가속기 구축 사업(290억원)은 법률에 설치가 명시되지 않은 대규모 신규사업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함

9)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10년의 경우 관련 부처 R&D 예산의 64.4%인 6조 9,583억원을 관리하였다.

10) 국회예산정책처,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I」, 2011. 7

- 지식경제부의 그린카등수송시스템원천기술개발사업(1,100억원)은 대기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 비중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의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사업(10억원, 신규)은 지식경제부의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공공복지 안전연구사업과 중복의 우려가 있음
-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의 경우 사업시기와 낙찰차액 등을 감안하지 않고 과다 계상된 사업이 다수 편성되었음
- 다부처 사업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 사업(교육과학기술부 484억원, 지식경제부 590억원)은 ITER 건설기간 연장 및 건설비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가 부담할 비용이 증가되었는데, 이를 반영한 부처간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ITER 건설사업비 변동 현황〉

	당초	변경	증가	
			증가액	증가율
ITER 건설기간	2007~2017	2007~2019		
ITER 건설비 (kIUA)	3,577.7	4,584.7	1,007.0	28.1
우리나라 부담금 (억원)	8,767	11,750	2,983	34.0

주: 1. kIUA는 ITER 화폐단위로써 kilo ITER Unit of Account의 줄임말임

2. 당초는 2005년기준(1kIUA=1.42M¹ 1¹=1,200원), 변경은 2010년 기준(1kIUA=1.552M¹ 1¹=1,475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1. 10

5. SOC 예산안

가. 현황과 특징

(1) SOC 예산안

- 2012년 SOC 예산안은 22.6조원으로 전년 대비 7.3% (1.8조원) 감소
 - 총지출을 구성하는 12개 주요 분야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예산액이 감소
- 다만, SOC 예산안 중 2012년도에 완료되는 국가하천정비(4대강) 사업 및 여수박람회 제외 예산안은 22.2조원으로 전년 대비 6.1% (1.3조원) 증가
 - 4대강 사업 예산안은 2011년 3조 800억원 → 2012년안 3,205억원
 - 여수박람회 예산안은 2011년 4,105억원 → 2012년안 944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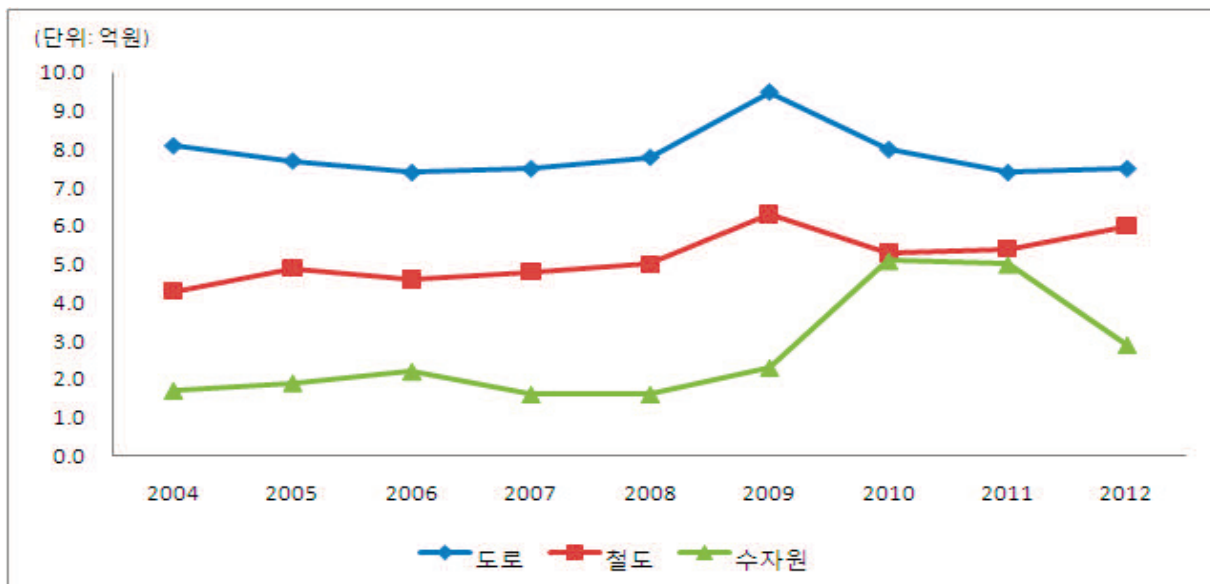
〈SOC 부문 내 자원배분 현황〉

(단위: 억원, %)

	2011년 예산액(A)	201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SOC	244,406	226,498	-17,908	-7.3
－ 4대강·여수박람회 제외	209,501	222,349	12,848	6.1
· 도 로	74,487	75,246	759	1.0
· 철 도	54,055	60,421	6,366	11.8
· 해운·항만	16,333	16,036	-297	-1.8
· 항공·공항	679	699	20	2.9
· 물류 등 기타	22,434	18,632	-3,802	-16.9
－ 여수박람회	4,105	944	-3,161	-77.0
· 수자원	50,182	28,994	-21,188	-42.2
－ 4대강	30,800	3,205	-27,595	-89.6
· 지역 및 도시	16,424	16,479	55	0.3
· 산업단지	9,811	9,965	154	1.6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2년도 예산안 개요」, 2011. 10

〈SOC 부문 내 자원배분 추이: 2004-2012년〉



자료: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자료(기획재정부) 및 2012회계연도 예산안 개요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SOC 전체 예산 대비 도로의 비중은 줄어들고, 철도, 지역및도시, 산업단지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음
 - 도로위주의 투자배분으로 일정 스톡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는 도로부문 투자는 감소(2004년 46.6% → 2012년 44.2%)
 -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철도부문 투자는 확대(2004년 24.7% → 2012년 26.5%)
 -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부문이 2009~2011년에 큰 폭으로 증가
 - 혁신도시 등 지역성장 거점 육성 및 산단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에 따라 지역 및 도시(2004년 2.3% → 2012년 7.1%)와 산업단지(2004년 1.7% → 2012년 4.4%) 투자는 확대

(2) 주택 부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국토해양부 소관 주택 부문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18조 9,829억원(일반회계, 국민주택기금)이 편성됨
-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금자리주택사업, 전세임대경상보조 등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주거환경개선,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등은 전년 대비 감소함

〈국토해양부 소관 2012년 주택부문 예산안 및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2010 예산/계획	2011 예산/계획 (A)	2012 예산안/계획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일반회계	1,801	2,407	2,274	-133	-5.5
○ 주택가격조사지원	635	585	569	-16	-2.7
○ 주택정책지원	11	14	15	1	7.1
○ 주거환경개선지원	1,155	1,808	1,690	-118	-6.5
국민주택기금	168,824	192,529	187,555	-4,974	-2.6
○ 보금자리주택	89,939	97,398	100,536	3,138	3.2
－ 국민임대(출자, 융자)	39,284	35,152	17,025	-18,127	-51.6
－ 영구임대출자	3,119	5,297	5,213	-84	-1.6
－ 공공임대(융자)	24,797	14,885	30,430	15,545	104.4
－ 분양주택지원(융자)	22,739	42,064	47,868	5,804	13.8
○ 전세임대경상보조	229	279	298	19	6.8
○ 준주택지원(융자)	—	300	300	—	—
○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56,977	68,000	61,500	-6,500	-9.6
○ 주거환경개선지원(융자)	100	50	50	—	—
○ 기타	21,579	26,503	24,873	-1,630	-6.2
합 계	170,625	194,936	189,829	-5,107	-2.6

주: 총지출 기준임

자료: 국토해양부

나. 검토방향

(1) 도로·철도

- 도로부문은 2011년 대비 1.0% 증액된 7조 5,246억원
 - 도로부문은 2009년 이후 그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2012년에는 예산규모 뿐만 아니라 전체 SOC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
 - 2012년 예산안은 고속도로건설(전년 대비 21.3%)과 민자도로건설(전년 대비 41.6%)이 증가하였고, 국도건설(전년 대비 -7.2%)과 지방자치도로지원(전년 대비 -9.2%)은 감액
- 철도부문은 2011년 대비 11.8% 증액된 6조 421억원
 - 철도부문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예산이 크게 증액된 2009년을 제외하고 2006년부터 계속적으로 예산 규모가 증가
 - 2012년 예산안은 고속철도건설(전년 대비 50.0%), 일반철도건설(전년 대비 15.0%), 철도안전 및 운영(전년 대비 13.1%)은 증가하였고, 광역철도건설(전년 대비 -27.6%)은 감액

〈연도별 도로 및 철도부문의 예산현황: 2006~2012년〉

(단위: 조원, %,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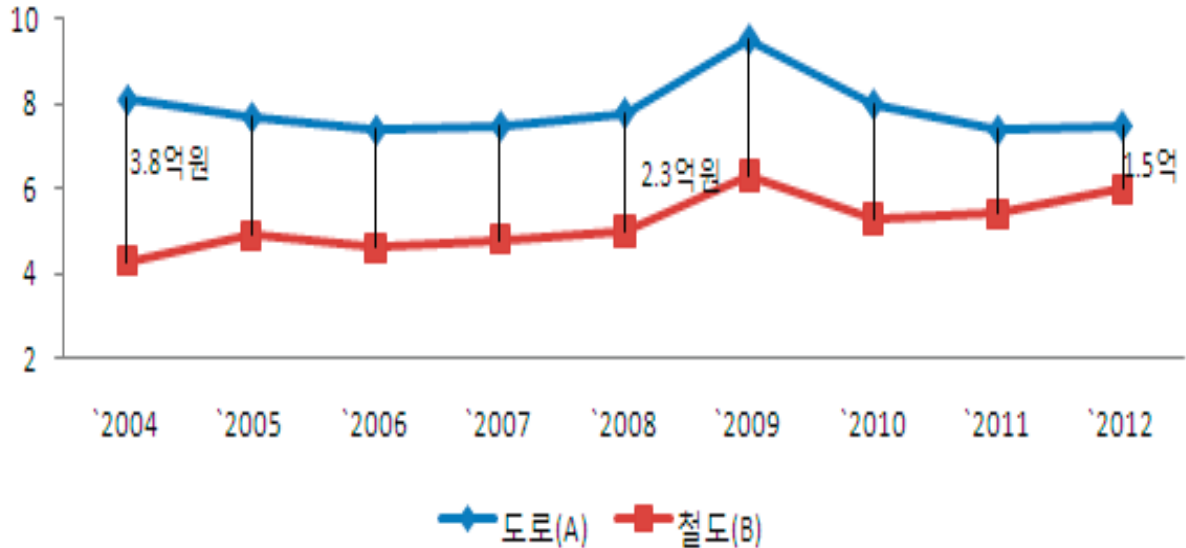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도로(A)	7.4	7.5	7.8	9.4	8.0	7.4	7.5
(총지출 중 도로비중)	(40.2)	(40.8)	(39.8)	(38.5)	(31.9)	(30.3)	(33.2)
철도(B)	4.6	4.8	5.0	6.3	5.3	5.4	6.0
(총지출 중 철도비중)	(25.0)	(25.5)	(26.1)	(25.5)	(25.5)	(21.1)	(26.5)
도로 대비 철도투자비중 (A/B)	1.61	1.56	1.56	1.51	1.51	1.37	1.25

주: 2012년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예산안 기준임

자료: 국토해양부 제공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도로 및 철도 연도별 예산 규모〉

(단위: 억원)



자료: 국토해양부 제공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 도로·철도간의 재원배분

- 도로 대비 철도 투자비중은 개선되었으나, 이는 철도 투자의 절대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 기인함
 - － 「도로 : 철도」 2006년 161 : 100 → 2012년 125 : 100
- 산업단지부문에서 산업단지진입도로가 전년대비 4.0%증액된 8,564억원 수준으로 도로부문에 속하지 않는 도로투자 규모 감안 필요

〈2012년 SOC 중 실제 도로 투자 비중〉

국토해양부 도로부문 7.3조원	
전체도로부문 7.5조원	
도로부문에 속하지 않는 도로(산업단지 등)8.9조원	

- 주. 1. 전체도로부문은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전부처의 도로부문 예산을 합한 것임
 2. 도로부문에 속하지 않는 도로예산은 도로부문 예산 뿐만아니라 산업단지부문의 산단진입도로, 물류 등 기타부문의 경제자유구역지원, 지역 및 도시부문의 광역교통시설건설 등을 포함한 예산임
 자료:국토해양부 제공 자료 및 2012년 예산안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 도로 부문의 재원배분

- 고속도로 및 민자도로 등 고속도로건설 부문 투자가 전반적으로 증가
 - － 철도와 대체성이 있는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교통난 완화를 위한 낙후지역 및 대도시권 혼잡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검토
 - － 고속도로 민자사업 지원을 위한 민자유치건설보조금은 전년대비 442.5% 증액된 3,052억 규모로 사업 착공 및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 편성 필요

(2) 수자원

- 2012년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79% 감소한 7,205억원임
 - 국가하천정비 사업 중 4대강 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89.6% 감소한 3,205억원이고, 4대강 사업 외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4% 증가한 4,000억원임
 - 국가하천과 관련된 예산안은 국가하천정비 사업 외에도 수자원공사지원 사업(전년 대비 39.5% 증가한 3,558억원), 국가하천유지관리 사업(신규, 1,997억원)이 있음
-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전국 지방하천의 치수·이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2% 증가한 7,600억원임
 -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음

〈2012년 예산안 상의 지방하천정비 사업 각목명세서〉

(단위: 백만원)

코 드	2012 예산안	
	금 액	내 역
[5338]	760,000	지방하천정비지원
[301]	760,000	지방하천정비
[330]	760,000	자치단체이전
[330-03]	76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760,000	1. 하천재해예방 760,000,000,000원

자료: 국토해양부

- 포괄적 예산안 편성 방식은 구체적 사업계획, 내용 및 예산안산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적정 예산안 규모에 대한 검토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시·도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서 지역별 사업계획과 예산안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정사업 규모를 심사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주택

- 주택구입·전세자금지원 사업(계속, 융자)의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9.6% 감소한 6조 1,500억원임
 - 주택구입자금지원 사업의 수요 감소와 대출대상 조건 부적절 문제
 -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주택시장침체로 인한 주택구입 수요 감소와 주택구입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 근로자·서민전세자금지원 사업의 부적절한 대상자 조건 문제
 -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지원 사업은 대상자 소득기준이 세대주의 소득으로 되어 있어 가구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 소득이 낮은

경우 동 사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조 536억원이 편성
 -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비중이 축소되고 분양주택 공급비중이 확대됨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세부사업간 물량 및 사업비 비중변화〉

(단위: 호, 억원, %)

	2010				2011				2012			
	계획 물량	비중	계획액	비중	계획 물량	비중	계획액	비중	계획 물량	비중	계획액	비중
국민임대	60,000	31.6	39,284	43.7	55,000	26.2	35,152	36.1	40,000	26.7	17,025	16.9
영구임대	12,500	6.6	3,119	3.5	15,000	7.2	5,297	5.4	10,000	6.6	5,213	5.2
공공임대	32,500	17.1	24,797	27.6	40,000	19.0	14,885	15.3	30,000	20.0	30,430	30.3
분양주택	85,000	44.7	22,739	25.3	100,000	47.6	42,064	43.2	70,000	46.7	47,868	47.6
합 계	190,000	100.0	89,939	100.0	210,000	100.0	97,398	100.0	150,000	100.0	100,535	100.0

자료: 국토해양부 제출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 최근의 부동산시장 침체와 전세가격 상승 등을 감안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2012년 SOC 분야 예산안의 유형별 검토방향

- 2012년 SOC 분야 예산안은 주로 국토해양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사업으로 구성되며, 31개 사업이 분석됨
 - 분석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제도 미비가 15개로 가장 많고, 집행실적 부진 5개, 사업계획 부실 4개, 예산 과다 편성 3개, 사업성과 미흡 2개, 필요성·공익성 결여와 사업의 유사·중복이 각각 1개 사업으로 나타남

〈2012년 SOC 분야 예산안 주요 분석사항〉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합 계
필요성·공익성 결여	1	—	1
사업의 유사·중복	1	—	1
집행실적 부진	5	—	5
예산 과다 편성	3	—	3
사업성과 미흡	1	1	2
사업계획 부실	2	2	4
법·제도 미비	6	9	15
합 계	19	12	31

- 2012년 예산안의 각 사업별 분석유형에 맞는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법·제도 미비로 분류된 사업들의 경우 법적근거를 마련 후 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집행실적 부진 및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업들의 경우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6.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가. 현황과 특징

- 2012년도 지방이전재원 예산안은 104.7조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여 정부총지출 증가율(5.5%)을 상회
 - 정부총지출(326.1조원) 대비 비중은 32.1%, 2011년(31.6%) 보다 상승
 - 지방이전재원의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섬
 - 지방교부세 33.1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5조원, 국고보조금 33.2조원

〈2012년도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현황〉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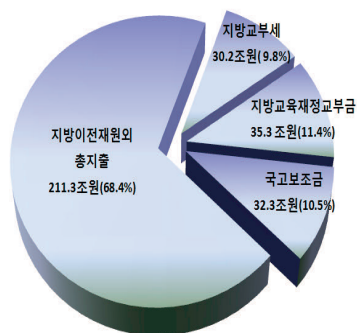
	2010	2011 (A)	2012(안)(B)	증감	증감률
지방이전재원(a)	91.3	97.8	104.7	6.9	7.1
지방교부세	27.4	30.2	33.1	2.9	9.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3	35.3	38.5	3.2	9.1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31.6	32.3	33.2	0.8	2.6
정부총지출(b)	292.8	309.1	326.1	17.0	5.5
비중(a/b)	31.2	31.6	32.1		

자료: 기획재정부(2011.1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방이전재원 변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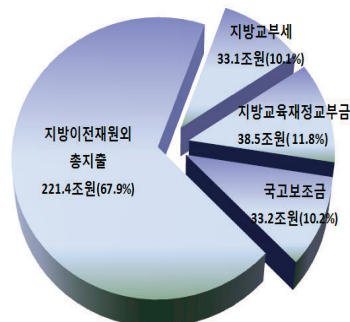
[2011년]

총지출: 309.1조원
지방이전재원: 97.8조원



[2012년(안)]

총지출: 326.1조원
지방이전재원: 104.7조원



주: 괄호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임

□ 지방이전재원은 2005년 이후 연평균 8.1% 증가하여 동기간 정부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6.5%를 상회

- 지방이전재원: 2005년 60.6조원→2012년(안) 104.7조원
- 정부총지출: 2005년 209.6조원→2012년(안) 326.1조원
- 2008년 이후는 지방이전재원 연평균 5.4%, 정부총지출 연평균 5.5% 증가
- 정부총지출 대비 지방이전재원 비중은 2005년 28.9%→2012년 32.1%

〈연도별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현황〉

(단위: 조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안)	연평균증가율	
									2005~12	2008~12
지방이전재원(A)	60.6	67.0	73.0	84.8	88.9	91.3	97.8	104.7	8.1	5.4
정부총지출(B)	209.6	224.1	237.1	262.8	301.8	292.8	309.1	326.1	6.5	5.5
비중(A/B)	28.9	29.9	30.8	32.3	29.5	31.2	31.6	32.1		

주: 2005~2011년까지는 각 연도 최종예산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2011.1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연도별 지방이전재원 및 총지출 대비 비중 추이〉



- 2012년 내국세 수입 증가율을 9.5%로 전망함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종합부동산세 총액)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교육세)이 큰 폭으로 증가
 -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9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2조원 증가
 -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0.8조원 증가
- 재정사용액 기준 중앙-지방재정 비교(2011년 기준): 중앙 42.8%, 지방 57.2%

- 총 조세에서 지방세의 비중은 21% 수준이나 ‘중앙⇒지방’ 으로의 이전재원으로 재정사용액은 지방이 더 큰 규모

〈중앙·지방 간 재정구조: 2011년〉

중앙정부 지방교부세: 30.2조원 국고보조금: 32.3조원 ↓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3조원 ↓ 지방교육재정 교육전출금: 9.1조원				
		조세	예산액	재정사용액
중 앙	79.0	56.0	42.8	
지 방	21.0	33.5	42.5	
지방교육재정	—	10.5	14.7	
합 계(%)	100.0	100.0	100.0	

주: 교육전출금은 지방세 중 보통세의 일정률(3.6%~5%)과 지방교육세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전출.
자료: 행정안전부(2011. 4)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12년 지방재정 여건: 통합재정수지 상으로는 상대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나, 사회복지 지출 등의 증가와 지방세입 여건의 불확실성 존재
- 지방재정 규모는 2010년 이후 그 증가율이 감소
 - 2009년 137.5조원, 2010년 139.9조원, 2011년 141.0조원,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 순계예산 규모: 2005~2010년〉

(단위: 조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순계예산규모	92.4	101.4	112.0	125.0	137.5	139.9	141.0
증가율	5.8	9.7	10.5	11.6	10.1	1.7	0.8

주: 각 연도 당초 순계예산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 2009~2010년 경기침체와 세출소요 급증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 재정상황은 호전

〈2011년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기준) 현황〉

(단위: 조원)

	2009년 결산(A)	2010년 예산(B)	2011년 예산(C)	증감(C-B)
통합재정수지	-1.9	-2.5	1.1	3.6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2011.10.

- 최근 6년간(2006~2011) 중앙정부 사회복지재정의 연평균 증가율은 9.1%인 반면,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5.6%
 - － 지자체 사회복지예산의 순계예산 대비 비중은 2006년 13.6%에서 2011년 20.2%로 증가

〈중앙 vs 지방의 사회복지 예산 추이(당초 순계기준)〉

(단위: 조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안)	연평균 증가율
중앙 정부	정부총지출(A)	224.1	238.4	262.8	284.5	292.8	309.1	326.1	6.6
	사회복지재정(B)	56.0	61.4	68.8	74.6	81.2	86.4	92.0	9.1
	비중(B/A)	25.0	25.8	26.2	26.2	27.7	28.0	28.2	—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20.7	22.4	26.6	29.4	31.6	32.3	33.2	9.0
지방 정부	순계예산(C)	101.4	112.0	125.0	137.5	139.9	141.0	미정	6.8
	사회복지예산(D)	13.8	17.3	21.7	24.1	26.5	28.5	미정	15.6
	비중(D/C)	13.6	15.4	17.4	17.5	19.0	20.2	미정	—

주: 정부총지출, 사회복지재정, 지자체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기준이며, 2009년은 본예산기준, 지자체순계예산, 사회복지예산은 당초예산기준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복지재정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예산현안분석 제35호, 2010.9.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 늘어나는 세출에 비해서 지방세수 여건의 개선가능성은 미흡
 - － 지방세수의 여건: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지방세수의 42% 수준(2011년 예산기준)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세수 여건이 불확실
 - － 자체재원의 큰 폭 증가는 기대하기가 어려움

- 세출소요에 비해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확충이 미흡하여 재정자립도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단위: 조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재정자립도	56.2	54.4	53.6	53.9	53.6	52.2	51.9

주: 각 연도 당초 순계예산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 이에 따라 총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1% 수준에서 큰 개선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국세:지방세 비율 현황〉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세	79.3	79.5	79.2	78.8	78.3	79.0
지방세	20.7	20.5	20.8	21.2	21.7	21.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나. 검토방향

□ 지방자치단체 재정 책임성 강화 제도 개선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확충이 미흡한 상태에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의존재원 비중이 증가
 - 2012년도 의존수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66.3조원, 2011년 58조원
- 의존수입이 늘어나고 지방재정에서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필요
 - 의존수입의 증가로 매년 지자체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의 차이가 발생하고, 당초예산과 결산집행액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남

〈지방자치단체 의존수입 현황〉

(단위: 조원, %)

	2009	2010(A)	2011(B)	증감(B-A)
자체수입	80.8	79.4	79.3	-0.1
의존수입	53.0	55.3	58.0	2.7
	(38.5)	(39.5)	(41.1)	
지방채	3.7	5.2	3.7	-1.5
합 계	137.5	139.9	141.0	1.1

주: 괄호안은 의존수입의 비중임.

자료: 행정안전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1. 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의 비교〉

(단위: 조원, %)

	당초예산(A)	최종예산(B)	증 감	증감률
2005	92.4	107.1	14.7	15.9
2006	101.4	115.5	14.1	13.9
2007	112.0	128.0	16.1	14.3
2008	125.0	144.5	19.5	15.6
2009	137.5	156.7	19.2	13.9
2010	139.9	149.8	9.9	7.1
2011	141.0	-	-	-

자료: 행정안전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1. 4.

- 지방재정 공시제도 강화: 의존수입으로 선심성, 행사성 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고보조금 관리제도의 개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철저,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제도의 개선, 국고보조금 이월, 계속비 등의 상시화 억제 등
-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압박에 대한 개선
 - 사회복지 지출과 관련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검토

- 현행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생활급여”, “영유아보육사업”, “기초노령연금”으로 한정, 이를 여타 필수 사회복지 사업으로 확대 검토
- 지방교부세의 복지기능 강화
 -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중 사회복지비 항목비중의 적정 수준에 대해 검토
 - 이주노동자의 확대 등으로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 시 외국인 등록인구수를 반영할 필요
- 지방이양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개선
 - 보편적 서비스(national minimum)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정 자치단체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일부 지방이양 사회복지 사업(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보육시설 등)의 재원구조 개선

IV 2012년도 예산안의 세출조정

1. 결산심사와 예산안심사의 연계를 통한 세출조정

-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 편성 및 심사와 연계하여 재정지출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
 - 2010회계연도 결산의 경우 예산안 편성 중인 8월 31일에 결산이 처리됨으로써 예산안에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국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총 1,107건에 대하여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고, 이 중 2012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 183건(16.5%)임
- 국회가 예산액 규모를 축소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액을 증액 편성한 사업은 69개로, 이들 사업의 2012년 예산액은 14조 9,572억원이고 증액 규모는 1조 8,678억원임¹¹⁾
- 국회의 시정요구사항 취지와 반대로 예산안이 편성된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2. 유형별로 본 세출조정

- 50개 부처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를 11개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예산의 과다편성’ 이 전체의 21.6%로 가장 많았음

11) 국회가 감액 취지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예산액이 증가한 대표적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용저수지 독높이기 사업으로 국회는 “막대한 저수지 독높임 사업예산으로 타 농업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동 사업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사업비 규모를 재검토” 하라고 시정요구하였으나, 2012년도 예산안은 2011년 대비 36% 증가한 1조 1,560억원을 편성하였음

〈2012년도 예산안 분석결과의 유형별 분류〉

(단위: %, %p)

유 형	2011예산안(A)	2012예산안(B)	증 감 (B-A)
필요성 · 공익성 결여	6.8	10.7	3.9
사업의 유사 · 중복	6.8	5.5	△1.3
기금의 역할 재정립	0.6	0.3	△0.3
집행실적 부진	19.2	8.9	△9.7
예산 과다 편성	14.1	21.6	7.5
예산 과소 편성	3.4	3.9	0.5
사업성과미흡	10.2	7.9	△2.3
법령위반	0.6	1.5	0.5
사업계획 부실	10.7	8.1	△2.6
법 · 제도 미비	20.9	15.1	△5.8
국회 지적사항 미반영	6.8	16.6	9.8
합 계	100.0	100.0	

주: 상기 수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전체결과에서 차지하는 각 유형별 비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전년과 달리 2012년도 예산안은 ‘예산의 과다편성 사례’가 가장 많다는 점은¹²⁾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개별 사업의 집행가능성이나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또한 국회 지적사항을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하지 않은 개별사업 수가 전년의 12개에서 97개로 크게 증가하였고, 비중 역시 전년 대비 9.8%p 증가하였다는 점은 국회의 결산심사결과가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충분히 투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함

12) 2011년도 예산안 분석에서는 법 · 제도 미비가 전체의 20.9%로 가장 많았으며, 집행실적 부진 19.2%, 예산 과다편성 14.1%의 순임

3.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세출조정

- 재정사업의 집행실적 부진은 한정된 국가재정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고 재정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게 하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가능액만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 과정에서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으로 분류된 총 158개 사업 중 2012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총 131개 사업임
 - 이들 131개 사업의 2012년 예산안은 2011년 예산액 대비 14.6% 증가한 2조 8,331억원으로, 동 사업의 2011년 9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38.0% 수준으로 매우 부진한 상태임
 - 특히 131개 사업 중 2011년 9월말 현재 집행실적이 50%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액이 증액된 33개 사업의 예산 증가액은 총 5,875억 3,400만원에 달함

4. 신규사업의 세출조정

- 2012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부사업은 35개 부처의 354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4조 7,589억원으로 총지출 326.1조원의 약 1.6%에 해당
 - 신규 재정사업의 예산액은 교육과학기술부가 1조 8,785억원¹³⁾으로 가장 많고, 국토해양부가 5,082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76억원¹⁴⁾ 순임
-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 2012년도 신규사업 중 ‘사업의 필요성 또는 법적 근거가 미흡’ 하거나,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계획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총 38개 사업으로 이들 사업의 예산액(안) 총액은 1조 245억원 규모인바, 신규 재정사업의 추진 필요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액 조정이 필요

13) 교육과학기술부의 신규사업 예산액이 많은 이유는 국가장학금 사업의 1조 5,000억원과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사업의 3,241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관리(2,713억원)와 대통령 선거관리(1,46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5. 유사 · 중복 사업의 세출조정

- 최근 4년간(2007~2010회계연도)의 결산심사 결과 유사 · 중복으로 인하여 국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 수는 평균 34개로, 이들 사업 중 2011년 대비 2012년 예산액이 감소한 사업은 9개, 예산액이 동일한 사업은 3개, 오히려 예산액이 증가한 사업은 9개임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년도 예산안 분석결과, 유사 · 중복 사업은 예년 수준인 33개로 분석되었으며, 이들 유사 · 중복 사업의 2012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736억원(17.6%) 증가한 1조 1,620억원으로 신규 사업이 7개(198억원) 포함되어 있음
- 결산심사 등에서 국회로부터 유사 · 중복이라는 지적을 받은 사업이 오히려 예산액을 증가하여 편성한다거나, 유사 · 중복 우려가 있는 신규사업이 편성되는 등의 문제점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1

재정운용의 여건

- 지난 2008년 미국 발(發)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게 된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다소 훼손되었으나 2010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13조원, GDP 대비 1.1%까지 회복
-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경기 둔화 등으로 세계 경제회복이 둔화되고 있음
 - 미국은 고용·주택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세도 둔화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긴축정책 때문에 성장세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남부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조기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재정적자 및 채무로 인해 재정정책 여력이 제약된 상황
- 선진국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심각한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추세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4% 이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 반면, 정부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의 경기가 완만히 회복되고 신흥국이 내수확대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여,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위험요인과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조기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계층간 격차 해소 및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재정운용 필요성 대두

2

2012년 경제전망

- 2010년 하반기 이후 둔화추세를 보인 우리 경제는 2012년 하강국면을 보인 후 2013년부터 서서히 회복될 전망
 - 2012년의 경제성장률은 3.5%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추후 점차 회복세를 보여 2013년 3.9%, 2014년 4.2%, 2015년 4.0%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의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경제성장률 예상치인 3.8%에 비해 0.3%p 낮은 수준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이 위축되는 가운데 내수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남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조기에 해소되기 어려워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고용부진과 부채조정으로 인해 미국 경제의 성장세도 낮을 것으로 전망
- 2012년 경제성장률 3.5%는 정부의 전망치 4.5%보다 1%p 가량 낮은 수준임
 -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총수출 물량증가율이 2011년 10.6%에서 2012년 7.5%로 크게 감소하는 등 내년도 수출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참고로, BOA메릴린치(4.6%)를 제외하면 삼성경제연구소(3.6%), LG경제연구원(3.6%) 및 UBS(2.8%), BNP파리바(3.4%) 등 대다수 국내·외 주요기관의 성장률 전망이 정부 전망보다 낮게 나타남
- 2011~201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3.8%는 지난 4월 당초 전망치(4.2%)에 비해 0.4%p 낮은 것이며, 정부의 중기 전망치(4.5%)에 비해서는 0.7%p 낮은 수준

- 이런 중기 전망은 부채조정으로 선진국경제의 성장탄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국내 가계부채 억제정책 강화와 고용증가세 약화 등으로 빠른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2012년의 경제전체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은 2011년 2.8%에서 2012년 3.2%로 소폭 확대되며, 이후 2013~2015년 기간 중에는 2.6% 수준의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실질 GDP에 물가상승을 감안한 경상 GDP는 2012년 6.7%, 2011~2015년 중 연평균 6.7%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 정부는 7.6%를 전제로 「2012년 예산안」 편성

2011~2015년 국내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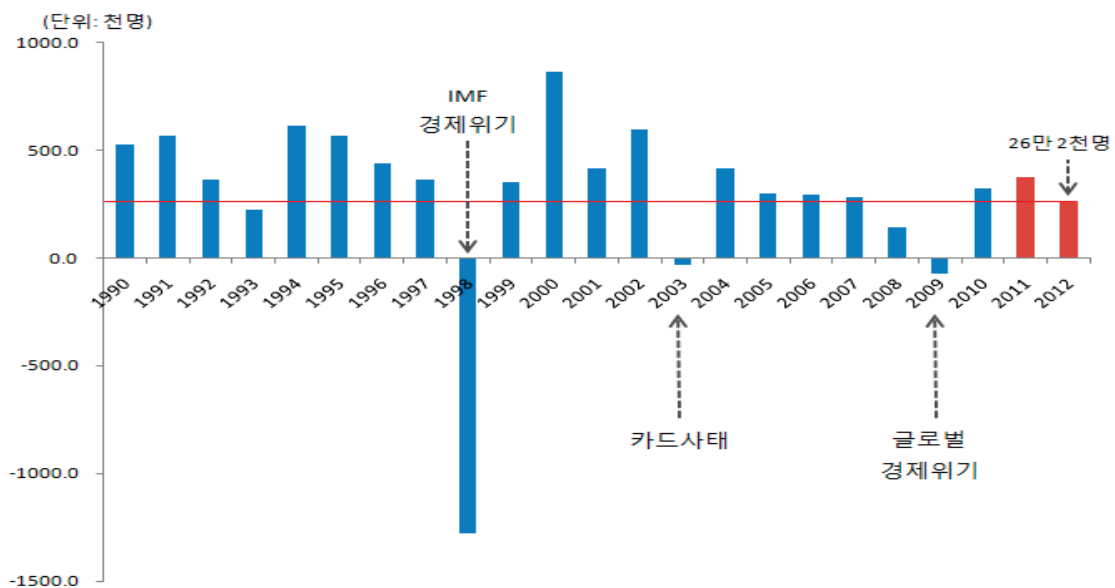
(단위: %, 억달러, 달러, 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내총생산	6.2	3.8	3.5	3.9	4.2	4.0
민간소비	4.1	2.9	2.7	3.1	3.4	3.3
설비투자	25.0	6.5	2.9	4.5	6.1	5.3
건설투자	-1.4	-5.8	-0.6	1.6	1.6	1.0
총수출	14.5	10.6	7.5	7.9	8.8	9.4
총수입	16.9	8.6	6.6	7.0	7.8	8.1
경상수지(억달러)	282.1	178.6	147.7	169.1	182.9	180.3
GDP디플레이터	3.7	2.8	3.2	2.6	2.7	2.6
소비자물가	2.9	4.4	3.6	2.8	2.9	2.8
실업률	3.7	3.6	3.7	3.6	3.5	3.5
원/달러 환율 (기준환율)	1,156	1,102	1,112	1,079	1,036	998
국고채수익률 (3년만기)	3.7	3.7	3.5	4.1	4.7	4.8
경상국내총생산	10.1	6.6	6.7	6.5	6.9	6.6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 연평균

-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고용전망에 따르면 2012년에는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금년에 비해 불과 0.1%p 상승하지만 취업자수가 26만 2천명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1993년 이래 가장 소규모의 고용창출 실적임

1990년대 이후 취업자수 증감폭 추이 및 2011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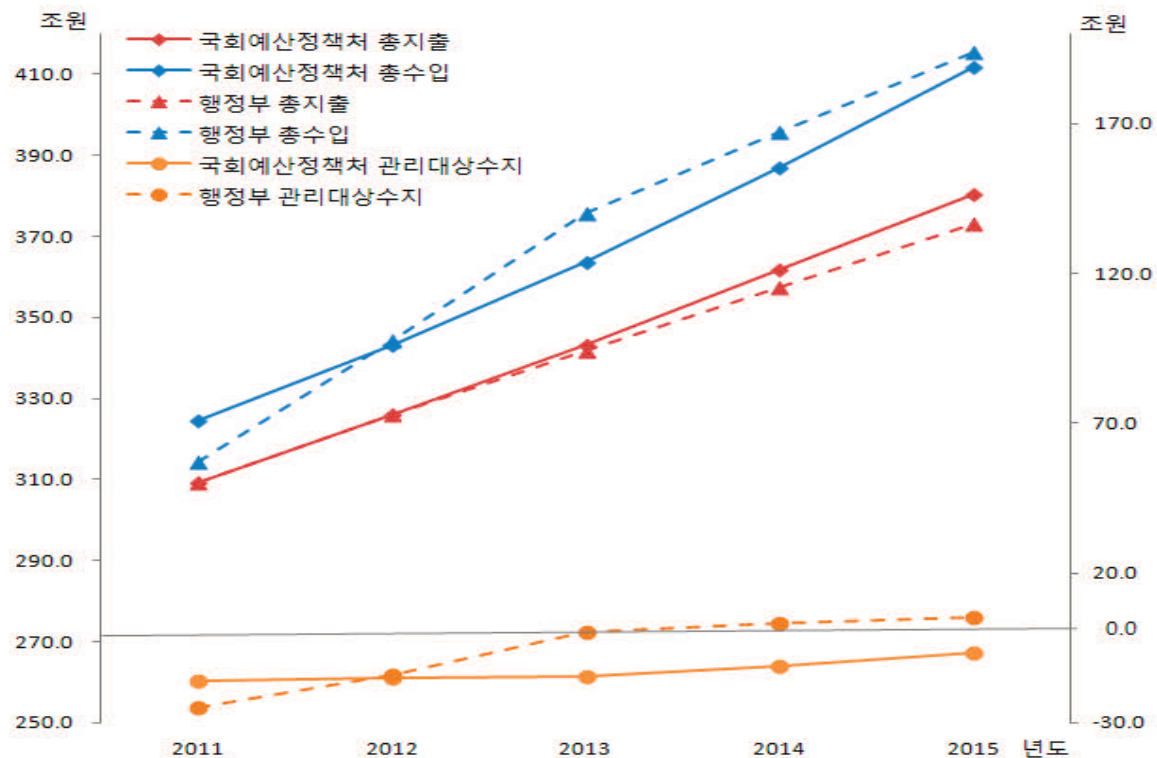
3

재정 전망

- 「2012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총수입 344.1조원(2011년 대비 29.7조원, 9.4% 증가), 총지출 326.1조원(2011년 대비 17.0조원, 5.5% 증가)으로 편성
 - 2012년의 통합재정수지는 18.0조원 흑자(2011년 대비 12.7조원 개선), 관리대상수지는 14.3조원 적자(2011년 대비 10.7조원 개선)
 - 국가채무는 448.2조원(2011년 전망 대비 12.7조원 증가)으로 GDP 대비 비율은 2011년 35.1%에서 32.8%로 감소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의 총수입이 예산안의 총수입 344.1조원에 비해 0.8조원 작은 343.3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
 - 국세수입의 차이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차이(경상성장률 0.9%p)에 주로 기인
 - 세외수입에서는 정부보유 지분매각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토지매각 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
- 2012년의 통합재정수지는 17.4조원 흑자, 관리대상수지는 15.0조원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
 - 통합재정수지는 정부 예산안보다 0.6조원, 관리대상수지는 0.7조원 가량 각각 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2015년 기간 동안 총수입이 6.1% 증가하고, 총지출이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총수입은 2011년 324.7조원에서 2015년 411.8조원으로 증가하고, 총지출은 같은 기간 309.1조원에서 380.6조원으로 증가할 전망

-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계획 기간 동안 총수입은 연평균 7.2% 증가하고 총지출은 이보다 2.4%p 낮은 4.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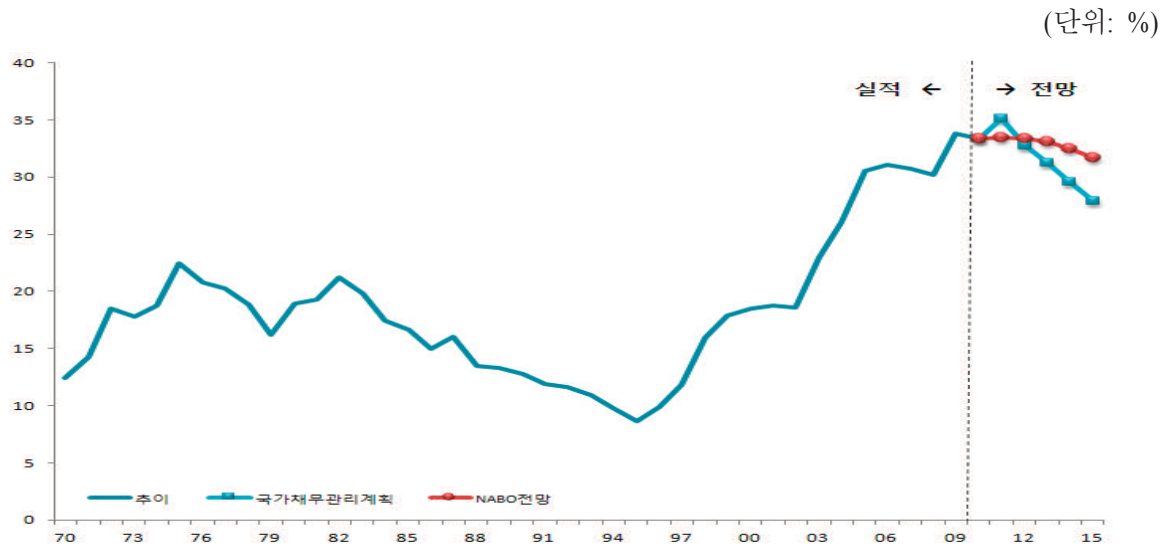
2011~2015년 중기재정전망 비교



- 관리대상수지의 경우, 정부는 2013년 흑자로 전환되고 흑자폭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데 반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2015년에도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정부의 균형재정 목표 년도인 2013년에는 정부가 0.2조원 흑자, 국회예산정책처는 14.4조원 적자로 전망
- 국가채무는 2011년 419.3조원에서 2015년 513.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GDP대비 비중은 2011년 33.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31.7%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11년 35.1%에서 2015년 27.9%로 감소할 전망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비해 보다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중



- 국회예산정책처의 금번 중기 전망은 지난 4월 발간한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다소 하락, 총수입은 다소 증가, 총지출은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되어 재정수지가 소폭 개선
 - 경제성장률은 당초 2010~2014년 기간 중 연평균 4.2%에서 2011~2015년 연평균 3.8%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선진국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일자리창출 지연 및 주택경기 약세 등으로 가계부문의 부진 등에 기인
 - 경제 전망의 하향 조정에 따라 총수입 증가율은 다소 감소(연평균 6.4% → 6.1%)하는 반면 총수입 규모는 2013년을 제외하고 당초 전망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는 2010년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이에 과세기반을 둔 2011년의 법인세 신고분, 종합소득세 등이 예상보다 증가

- 총지출 전망은 고용보험의 자영업자 임의 가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제도변화로 인해 의무지출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총지출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관리대상수지는 총수입 전망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적자폭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 당초 11.1조원 적자로 전망하였으나 6.7조원으로 적자 폭이 감소

4

재정운용목표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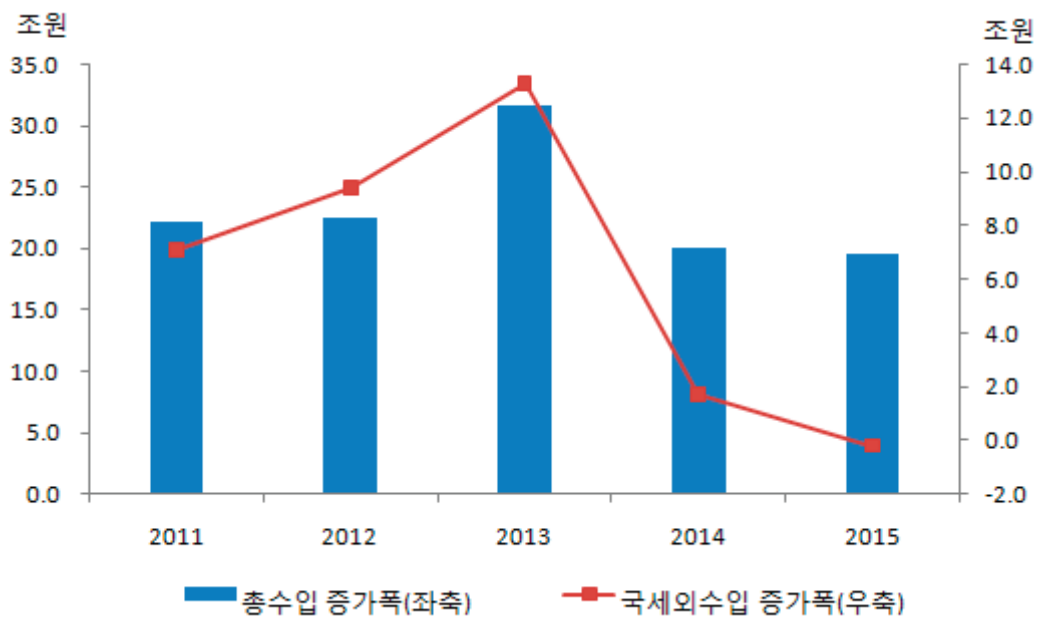
- 정부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재정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실현가능성 및 적절성 등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음
-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을 한 해 앞당긴 것은 재정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재정건전화가 일시적인 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세입과 세출면에서 구조적인 조정이 있었어야 함
 - 재정건전화가 항구적 효과를 가지려면 세출측면에서는 의무지출을 억제하고 세입측면에서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등의 세원확대가 필요함
 -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의무지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고 세법개정안에서는 비과세감면이 오히려 세입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와 있음
 -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의 주요 수단은 총수입 증가가 압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정부가 전제로하는 거시경제의 전망과 비교해 보았을때 2013년 총수입이 재정을 균형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늘어나기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보임
-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균형재정운용목표(0.2조원 흑자)와 달리 2013년 관리대상수지가 14.4조원 적자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망 차이(14.6조원)는 주로 총수입 전망 차이(12.0조원)에 기인
- 행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이 조기달성 가능하다고 보면서 총수입을 375.7조원으로 전망하였으나 이는 국회예산정책처 예상치(363.7조원)보다 12조원(3.3%) 높은 것임(국세 4.6조원과 국세외수입 7.4조원)

- 정부는 국세수입이 2012년 205.9조원(6.8%)에서 2013년 224.2조원(8.9%)으로 큰 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정부는 국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3.3조원(9.6%)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은행(6.5조원)과 산업은행(2.6조원) 등 정부지분매각을 2013년에 집중시킨데 따른 것임

NABO와 정부 총수입 전망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총수입	NABO	324.7	343.3	363.7	386.9	411.8
	정부	321.6	344.1	375.7	395.8	415.3
	차이	-3.1	0.8	12.0	8.9	3.5
국세수입	NABO	192.3	205.5	219.6	235.4	251.5
	정부	192.8	205.9	224.2	242.6	262.3
	차이	0.5	0.4	4.6	7.2	10.8
세외수입	NABO	132.4	137.8	144.1	151.5	160.3
	정부	128.8	138.2	151.5	153.2	153.0
	차이	-3.6	0.4	7.4	1.7	7.3

총수입 및 국세외수입의 연도별 증가폭



- 정부의 2013년 균형재정 조기달성은 국세의 과대추계와 국세외수입의 정부지분 매각 등에 기인하며 이들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 정부는 경상성장률이 2012~2013년 동일(7.6%)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국세는 2013년에 돌연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계획하고 있어, 과대추계로 불소지를 남김
 - 국세외수입도 이 시기 정부보유 지분 매각이 집중되고 있는데 수년간 매각하지 못하였던 기업은행의 경우처럼 적정시점에 적정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이 쉽지 않음
- 한편 금번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작년에 제출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해 봐도, 2013년의 총수입이 당초 계획 대비 급격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3년의 총수입을 365.1조원으로 전망하였으나, 올해 제출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375.7조원으로 전망하여 10.6조원의 차이가 발생
 - 이는 2011~2012년과 2014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음을 감안할 때 2013년 수입만 크게 확대시켰음을 시사함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중기 총수입 전망치 비교

(단위: 조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수입 (2010~2014년 계획)	290.8	314.6	342.9	365.1	390.9	
총수입 (2011~2015년 계획)	-	314.4	344.1	375.7	395.8	415.3
차이	-	-0.2	1.2	10.6	4.9	-

5

재정운용 방향

- 재정팽창지수(FI) 측정을 통해 관리대상수지 기준 재정기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임
- 2010년 긴축기조의 기저효과에 따라 2011년 전망은 0.14로 다소 확장적인 기조로 나타남
 -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정부지출계획의 FI는 2012년 -0.18, 2013년은 -0.34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긴축적인 기조를 보이고 이후 2014년 -0.52, 2015년 -0.62로 긴축기조가 유지될 전망
 - 이에 반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은 2013년 -0.22, 2014년 -0.33, 2015년 -0.43으로 정부계획보다 약한 긴축 기조를 보임

FI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정부 지출계획	-2.16	0.14	-0.18	-0.34	-0.52	-0.62
국회예산정책처 지출 전망			-0.20	-0.22	-0.33	-0.43

- 남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로 금년 하반기 이후 각국의 재정추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기조를 긴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함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조설정으로 평가
- 금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운용 목표인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은 균형달성목표를 지난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것으로서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
- 그러나 균형목표 연도인 2013년은 차기정부의 출범 이후임을 감안할 때, 현 정부가 임기 중 재정책임성을 완수하고자 했다면 미리부터 재정을 좀 더 긴축적으로 운용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에서 총지출 규모 증가율을 「경상 잠재 GDP 성장률 -2%p」 수준에 맞추는 재정준칙의 적용을 제안하면서 2011년 총지출 규모가 확정예산보다 2.9조원 적은 306조 2천억원 수준이 바람직함을 제시한 바 있음
-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임을 전제로 하였을 때, 2012년 예산은 긴축기조를 나타내어 경기 동행적 재정운용이 될 가능성
 - 경기 위축기에 재정을 긴축하는 모습은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 세계경제 여건이 상당기간 불투명하며 우리재정의 장기적 여건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공식적 재정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부문의 부채가 막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내년 예산의 긴축기조를 다소 완화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
 - 세계 경제의 동시적 위축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2012년에는 긴축적인 재정기조를 다소 완화하여 지출 규모를 예산안보다 소폭 확대한 뒤 세계 경제 및 우리 경제가 서서히 회복하여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기 시작하는 2013년 이후 재정기조를 다시 긴축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거시경제에 무리를 주지 않는 바람직한 중기재정운용 방향일 것으로 판단함
- 경기 하강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기조를 다소 완화하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을 모색
 - 2012년의 재정기조를 중립적(FI=0)으로 만드는 총지출 규모는 328.8조원으로 예산안 326.1조원 보다 2.7조원 더 큰 규모이며, 이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여 최근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는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어 바람직한 재정운용으로 보기 어려움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1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은 33.5%이며, 2012년에도 이 비율을 유지하는 총지출 규모는 327.8조원으로 정부 예산안(326.1조원)에 비해 1.7조원 정도의 지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의 경기 대응성을 강화하는 재정운용에 대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

6

「2011년 세법 개정안」 분석

- 세법개정안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대내외적 경제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나, 개별 정책수단의 통일성, 효과성, 적합성에서 미흡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성장에서 분배, 투자 중심에서 고용친화로의 정부 정책기조 전환은 바람직함
 - 충분한 재평가 논의 없이 일몰종료예정 비과세감면을 연장함으로써, 추가 감세철회에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 효과를 상쇄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등의 고용확대 효과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대책은 조기에 성공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편법증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는 과세의 법적 요건이 미비하며 과세베이스를 부적합하게 설정하였고, 가업상속공제는 공제대상이 필요이상으로 광범위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
-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2011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2012~2015년의 4개년간 세수효과는 총 △8.5조원
 - (증가요인)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철회(+11.9조원),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1.0조원) 등
 - (감소요인)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등(△6.2조원), 소득세 신용카드소득공제(△3.6조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4.2조원) 등
- 세법개정안 발표 자료의 세수효과와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서의 세수효과 간 일관성 결여로 정부발표 세수효과에 대한 혼란 가중

-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전년대비방식과 비과세·감면의 일몰연장을 가정하고 있는 반면, 비용추계서는 기준연도방식과 비과세·감면 일몰종료를 가정
- 공제율 6%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실효공제율 4.8%(행정부 3% 추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사실상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부분적 상시화가 이루어짐
 - 경기침체기에 상시적으로 운영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3년 단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된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상시화를 의미함
 - 고용확대라는 당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4%)을 낮추고 추가공제율(2%)을 높일 필요가 있음
 - ※ 기본공제율 4%는 고용유지만을 조건으로 하고, 추가공제율 2%는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해 공제
-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편법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단순하여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하며, 과세베이스도 주식가치 증가분이 아니라 증여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영업이익으로 되어 있어 편법증여를 억제하기에 역부족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
 - 외감이상 기업(4,389개) 중 과세요건 충족기업 793개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정한 결과 2015년까지 1.0조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정부(100여개 기업만 고려)가 추정한 0.3조원보다 세수효과가 커질 수 있음
- 가업상속세부담 완화는 가업 승계의 필요성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공제한도(최고 500억원)도 지나치게 높아 다른 상속재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어 사회적으로 수용이 쉽지 않을 우려가 있음
 - 가업상속에 대해서 과세를 하되 경영권 보호차원에서 일정기간(최고 20년) 상속세 납부를 유예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 정부는 32개에 이르는 비과세·감면('13년 △6.7조원)을 정책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재평가 없이 반복적으로 일몰을 연장
 - 논쟁의 중심이 되어왔던 감세철회에 따른 세수증가는 3.4조원('13년 귀속 기준)인데 비해, △6.7조원의 비과세·감면은 단순 연장하고 단지 10개 항목(0.3조원)만을 예정대로 일몰종료
- NABO 자체 분석결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부 있는 반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면제는 1인당 혜택(연 24만원)이 적어 노동공급 유인이 되기 어려움
- 임대주택 공급증대를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등 전월세 대책은 조기에 주택시장 안정화효과를 이루기 어려워 신중한 검토 요구
 -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는 상환액 규모가 큰 중산층 이상(평균소득 5,403만원)에게 혜택이 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임
- 근로장려세제의 확대를 무자녀가구(71만 가구)를 포함하여 76만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을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나, 저소득층의 취업유인은 아직도 부족
 - 1인자녀 가구를 예로 들면, 한국의 점증률(15%)은 EITC가 정착한 미국(34%)에 비해 절반이하로 낮아 노동공급 유인이 작음
- 신종금융상품 및 국내발행외화표시채권 과세는 일부 금융상품에서나마 과세기반을 확대(세수증가 0.1조원)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본격적인 금융과세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
 - 자본시장 성숙에 따라 세수 확충을 위해 금융서비스(총 수수료 24조원) 부가가치세 과세,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투기자본거래(40조원) 금융거래세(토빈세) 과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 필요

7

재정관리시스템의 개선 과제

- 정부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관리강화, 재정통계개편 등 11개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 국가채무관리 강화, 재정통계 개편, 장기재정전망 체계 구축,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 운영 강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R&D 지원체계 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도입, 지방재정관리 강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국유재산관리 강화 등
- 이 중 ‘재정통계 개편’은 당초 국가채무 논쟁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음
 - 발생주의를 적용하고 IMF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재정통계를 보완하는 수준이며, 국회의 예·결산 심사 등 국내에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 통계에는 변화가 없는 개편임
 - －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에 대한 별도의 개정 사항 없음
 - 개편안 중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3개 특별회계의 일반정부 포함 여부, 기금에 대한 시장성테스트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 필요
 - 공적연금 충당부채, 공공기관 부채 등 미래에 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는 추후 사회안전망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탄력적 운용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부담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재정 수지에 따라 보험료율의 탄력적 적용, 피보험기간과 소정급여일수에 있어 임금근로자와 형평성 고려,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정책과의 조화 등을 모색할 필요

- ‘장기재정전망 체계 구축’은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재정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이지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음
 -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장기 재정전망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영국·EU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
 - 「국가재정법」에서 이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 등에 장기 재정전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5년 단위의 중기 수준만 제시
 - 국회예산정책처는 연내에 2050년까지의 장기 재정전망을 제시할 예정
 - 정부 전망에 대한 입법부의 비교 준거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선(base-line) 방식으로 거시경제, 총수입, 총지출, 국가채무에 대해 전망하고 후속 작업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예정
- 정부가 제시한 개선방안 이외에 국회에 대한 재정정보의 공개 확대 필요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대한 국회의 접근 권한을 확대하고, 예·결산 정보, 성과정보 등 다양한 재정정보에 국회가 접근 가능토록 할 필요
 - 세출(지출) 뿐만 아니라 세입(수입)의 각 목별·부처별 자료 제공 필요
 - 재정총량, 재원배분 등에 대한 예산(총수입·총지출)과 결산(통합재정)의 재정통계 일관성 확보 등 필요

8

첨부서류에 대한 분석

- 정부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11~201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11~2015년 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
-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는 재정적자를 충당하는 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 국고채 투자에 대한 관리 필요
 - 재정적자와 적자성 채무 증가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며, 기금의 여유재원의 사용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충당하는 재정운용을 국회가 명확히 파악 할 수 있도록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법 개정 검토 필요
 - 2010년 상반기 이후 빠르게 증가한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은 2011년 7월 말 현재 58.3조원으로 국고채 총 상장잔액 335.6조원 대비 17.4% 수준으로 환율 및 자본유출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리가 필요
-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서는 국가보증채무 추계의 정확성 제고, 전망 근거의 구체적 제시가 필요하며, 채무별 관리방안 보완 필요
 - 장학재단채권은 재단 내 자산부채종합관리시스템을 보다 조속히 구축하고 2014년 안에 보증채무로 현실화될 예정인 산업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은 시중은행의 특별기여금 수납 실적이 2002년 당초 공적자금상환대책 수립 시의 계획에 매년 8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은 ‘전년도 관리계획에 대한 평가’ 등 의무 작성 사항에 대해 보다 충실하게 계획을 작성하고, 연금성 기금에 대해서는 현행 5년이 아닌 30년 이상의 장기 전망 제시 필요
 - 사학연금기금은 ‘전년도 관리계획에 대한 평가’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구조조정기금, 국민주택기금은 기금수지 변동요인분석,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부채와 관련된 변동요인분석이 포함되지 않았음
 -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기금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금성 기금 등의 장기 재정관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5년 단위의 계획만 제출하고 있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개 회 사

주 영 진 국회예산정책처장

격려사

박희태 국회의장

축 사

정 갑 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제 발표 1

「일자리 예산」 2012년 예산안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Ⅰ. 예산규모 및 재정건전성 강화 / 3

Ⅱ. 2012년 예산안의 중점 / 5

1.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
2.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린 예산
3.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한 예산

Ⅲ.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 / 18

1. 분야별 규모 및 증가율
2. 분야별 자원배분 내용

주제 발표 2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I.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 / 23

1. 2011년 국세수입 전망 및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
2. 주요 세목 관련 2011년 세수 분석
3. 주요 세목 관련 2012년 세수 분석

II.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 등 / 26

III. 중기 국세수입 전망(2011~2015년) / 27

2012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I. 2012년도 예산안의 구조 / 33

1. 수입구조 분석
2. 지출구조 분석

II. 자원배분의 특징 및 평가 / 46

1. 자원배분의 특징
2. 평가
3. 분야별 자원배분의 추이 및 국제비교

III. 분야별 자원배분의 주요 쟁점 / 50

1. 복지 예산안
2. 일자리 예산안
3. 교육 예산안
4. R&D 예산안
5. SOC 예산안
6.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IV. 2012년도 예산안의 세출조정 / 91

1. 결산심사와 예산안심사의 연계를 통한 세출조정
2. 유형별로 본 세출조정
3.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세출조정
4. 신규사업의 세출조정
5. 유사 · 중복 사업의 세출조정

주제 발표 4

2012년 경제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I. 재정운용의 여건 / 97

II. 2012년 경제전망 / 98

III. 재정 전망 / 101

IV. 재정운용목표에 대한 검토 / 105

V. 재정운용 방향 / 108

VI. 「2011년 세법 개정안」 분석 / 111

VII. 재정관리시스템의 개선 과제 / 114

VIII. 첨부서류에 대한 분석 / 116